

20

0

1

7

2017 연 차 보고서



EXPERTISE

NON-PARTISANSHIP

OBJECTIVITY

50





INTRODUCTION

국회예산정책처 소개



설립 근거 및 목적

「국회법」 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에 설립된 입법부의 재정전문 의정지원기관입니다.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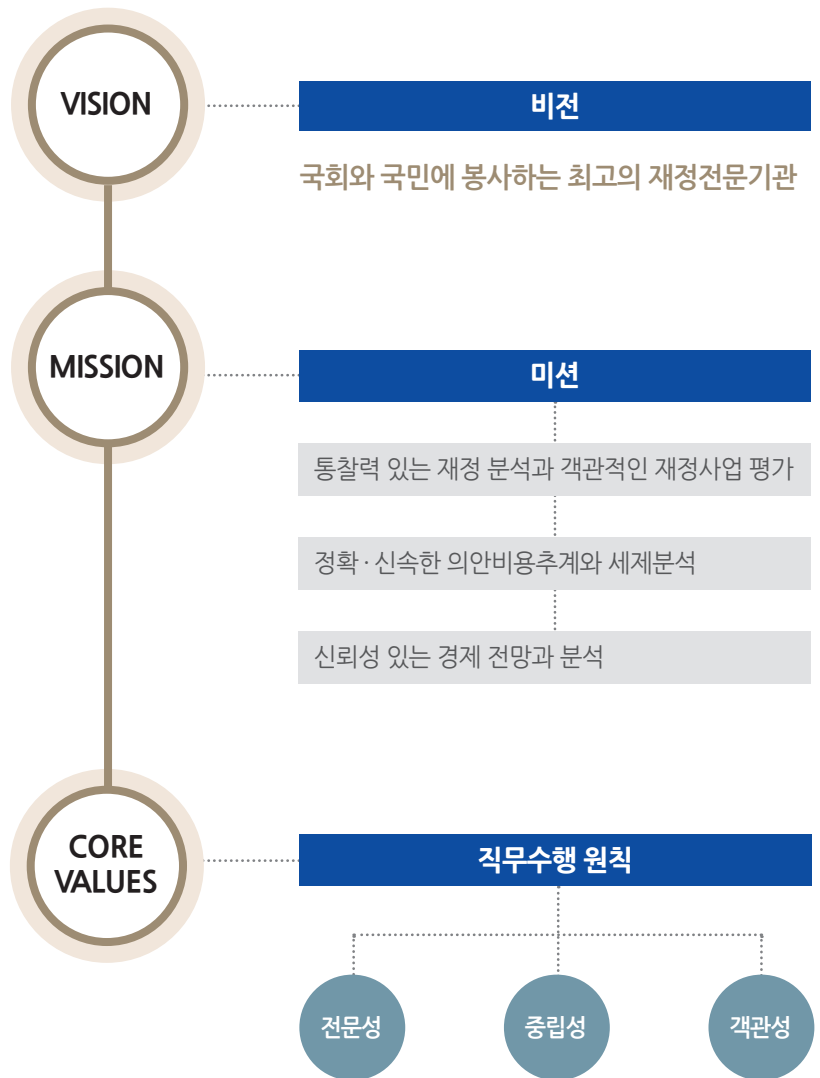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의 주체인 국회의원을 지원하고자 재정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 분석	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법안비용 추계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용비용의 추계
 예산안 및 결산 분석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재정사업 분석 및 평가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조사 및 분석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에 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정권과 입법권이 효율적이며 공고하게 행사되도록 지원하는 재정 전문기관입니다.

○
업무추진
기본방향



HISTORY

국회예산정책처가 걸어온 길

2003

07. 18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10. 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 20

초대 처장 최광 임명

2004

03. 03

국회예산정책처 개청식

2012

06. 25

「2012~2060
장기 재정전망」 발간

2011

03. 04

제4대 처장 주영진 임명

2013

02. 28

제5대 처장 국경복 임명

10. 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

2015

02. 23

제6대 처장 김준기 임명

03. 19

국회예산정책처로
의안비용추계 일원화



2005

06. 02

제2대 처장 배철호 임명

2007

06. 08

정부 성과관리 평가 실시

2010

01. 01

국세통계자료 요구권 확보

2008

09. 01

제3대 처장 신해룡 임명

2016

05. 17

미국 의회예산처와
상호협력 MOU 체결

2017

01. 20

제7대 처장 김춘순 임명

08. 21

직제 개편으로
조직구조 재설계

- 예결산 분석·사업평가 등 분산·중첩된 기능 통합
- 비용추계·경제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RESULT

주요 성과



설립 14년만의 전면적인 조직개편

2017. 8



조직

2실 1국 1관 2심의관
3담당관 17과

01

예산분석실 재편

예산분석과 사업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정분석
시너지 효과 제고

02

추계세제분석실 신설

재정 추계 및 전망 기능을
통합하고, 세제분석
기능 강화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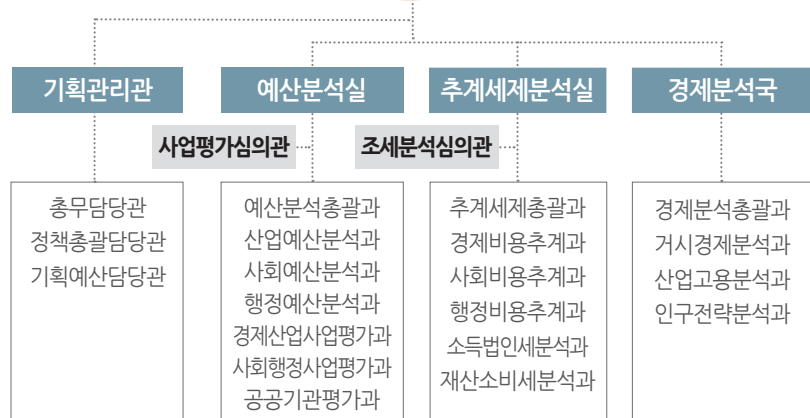
경제분석국 재편

경제전망·거시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인프
라 제공

04

기획관리관 재편

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여
부서간 협업 및 분석총괄
지원 기능 제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100여 권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예산안 및 결산심의를 지원하고, 경제성장률, 세입 전망 등 국가경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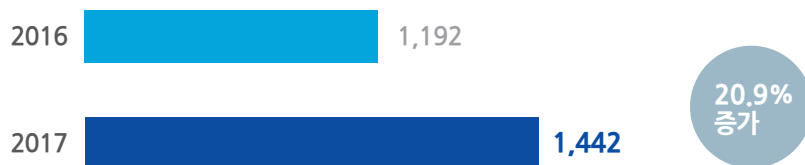


재정분석의 양적·질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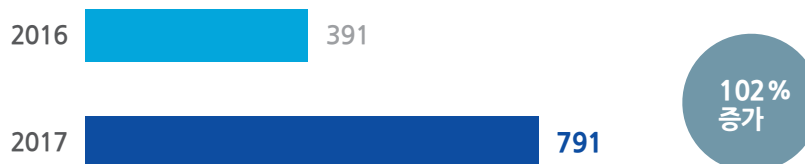
비용추계(건)



예·결산 분석 보고서 분석주제수(건)



조사·분석 회답(건)



RESULT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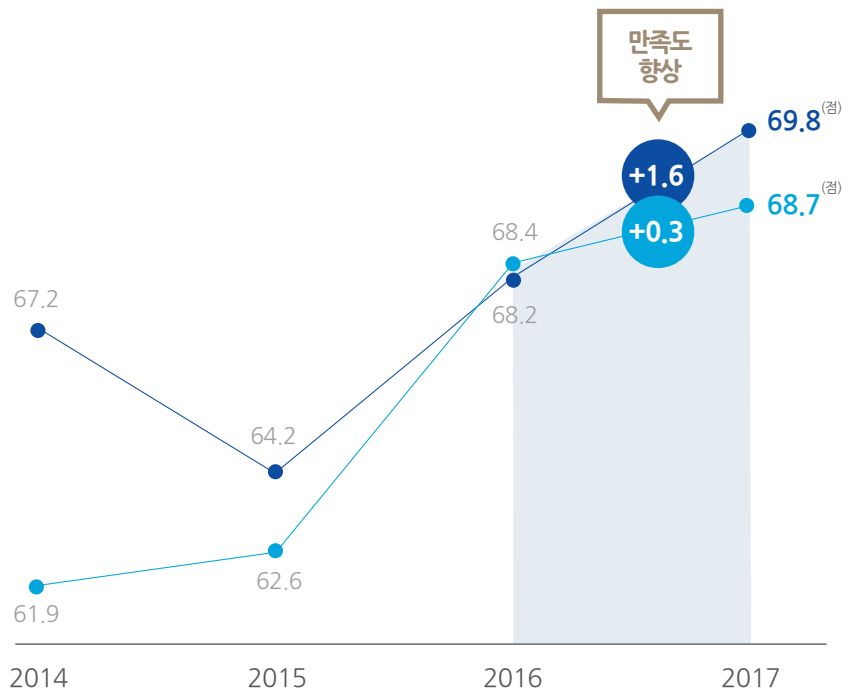
신뢰성 있는
분석으로 언론보도
급증(건)



16.4%
상승



2017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향상



● 분석 보고서 만족도

● 법안비용추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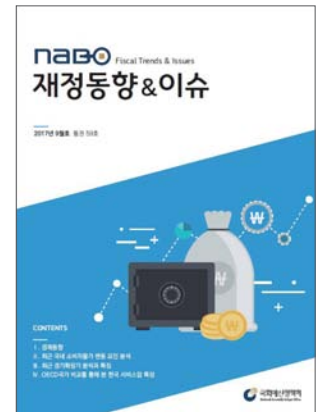
분야별 전문지 체계 완비



전문지 경제동향&이슈

창간일 09.8월

발간주기 월간



전문지 재정동향&이슈

창간일 17.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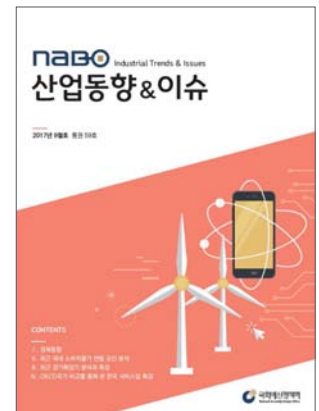
발간주기 분기별



전문지 추계 & 세제 이슈

창간일 17.10월

발간주기 분기별



전문지 산업동향&이슈

창간일 17.10월

발간주기 월간

PICTURE

사진으로 보는 2017 NABO

주요 업무

기관동정

대외협력



07. 20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정안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사업의 심층분석과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예측력 있는 추계와 전망, 전문적인 세제분석으로 손꼽히는 재정전문기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PICTURE

사진으로 보는 2017 NABO

주요 업무

기관동정

대외협력



07. 04 2017 나라살림 토론회(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 - 일자리 창출, 복지,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11. 1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09. 08 2018년도 예산안 업무협의(국세청)



09. 12 2018년도 예산안 업무협의(산업통상자원부)



09. 13 2018년도 예산안 업무협의(문화체육관광부)

PICTURE

사진으로 보는 2017 NABO

주요 업무

기관동정

대외협력



10. 24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4주년 기념식 개최

2017년 김춘순 처장이 국회예산정책처 제7대 처장으로 취임하였고, 재정·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실국 단위 조직에서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세미나, 교육, 연찬회 등 임직원들의 사기와 긍지를 함양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1. 20 김춘순 처장 취임식



02. 01 한국경제의 구조적 난제와 해법 세미나 개최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초청)



06. 30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08. 21 NABO 새 출발의 날 기념식 개최(조직개편 기념)

PICTURE

사진으로 보는 2017 NABO

주요 업무

기관동정

대외협력



04. 24~25 직원 연찬회



■ 09. 18 국립대전현충원 및 대전교도소 방문

PICTURE

사진으로 보는 2017 NABO

주요 업무

기관동정

대외협력



09. 26 추석맞이 봉사활동(서울SOS어린이마을 방문)



11. 17 외교부 강경화 장관 방문



12. 15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신소라 강사)



12.18 제2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12. 20 연탄배달 봉사활동



12. 28 NABO 송년회

PICTURE

사진으로 보는 2017 NABO

주요 업무

기관동정

대외협력



04. 06 제9회 OECD회원국 의회예산기관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 참석(김춘순 처장, NABO Past, Present and the Future 발표)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적인 의회 재정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OECD 주요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등 국외 연수단이 방한하여 한국의 예산체계와 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04. 06~07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존 블론달 면담(국회 재정 권한 강화)



04. 10 벨기에 최고재정자문위원회 방문(재정건전성 확보, 고령화 사회 대응 등 현안에 대한 독립재정기관의 역할 논의)

PICTURE

사진으로 보는 2017 NABO

주요 업무

기관동정

대외협력



06. 01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대표단 방문



06. 05 제5회 GN-PBO 회의



12.13 2018년 개최 예정 제10회 OECD 의회예산기구 회의
홍보(뉴질랜드 의회)



06. 27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태국 대표단 면담



연구·분석 보고서 발간

1. 예산·결산분석 및 사업평가 보고서	30
◆ 대한민국 재정 2017	30
◆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31
◆ 2017 경제·재정수첩	32
◆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17권	33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34
◆ 2018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 20권	35
◆ 사업평가 17-01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36
◆ 사업평가 17-02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37
◆ 사업평가 17-03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38
◆ 기획평가시리즈 (5권)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39
◆ 기획평가시리즈 (5권)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40
◆ 기획평가시리즈 (5권)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41
◆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분석	42
◆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43
◆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44
2. 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	45
◆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45
◆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46
◆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47
◆ 트렌드 세법 - 과거 20년간 세법개정안의 궤적을 담다	48
◆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49

◆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Ⅰ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50
◆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Ⅱ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51
◆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Ⅲ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52
◆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Ⅳ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53
◆ 2017 조세수첩	53
◆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2017-1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54
◆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2017-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 추계	55
◆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56
3.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보고서	57
◆ 2017년 수정 경제전망	57
◆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58
◆ 경제현안분석 제93호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59
4. 정기간행물	60
◆ NABO 재정동향 & 이슈(창간호)	60
◆ NABO 재정동향 & 이슈(여름호)	61
◆ NABO 재정동향 & 이슈(가을호)	62
◆ NABO 추계 & 세제 이슈(창간호)	63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1호)	64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2호)	66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3호)	67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4호)	68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5호)	69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6호)	70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7호)	71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8호)	72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59호)	73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60호)	74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61호)	75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62호)	76
◆ NABO 산업동향 & 이슈(창간호)	77
◆ NABO 산업동향 & 이슈(제2호)	78
◆ NABO 산업동향 & 이슈(제3호)	79

II

의안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회답

1. 법안비용추계 현황	82
가. 법안비용추계 개관	82
나.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답 현황	82
다. 관련 보고서 발간	84
2.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85
가.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85
3. 일반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86
가. 2017년 처리 현황	86
나. 최근 5년간 추이	86
다. 신청 및 회답 절차	87

III

의정활동 지원 및 기관 역량 강화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원	90
가. 2017 나라살림 토론회 :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	90
나.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	94
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98
2. 정책 토론회 개최	99
가. 조세정책토론회: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99
3. 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황	102
가. 전문가 간담회 현황	102
4. 정보화 사업	107
5. 대외협력	110
가. 제9회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 회의	110
나. 그 밖의 국제교류	112
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14
7.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	115
8. 직원연구모임	117
9. 연구용역	118
10. 2017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119



IV

부 록

1. 조직 및 예산	122
가. 조 직	122
나. 인력총원	124
다. 인사 및 상훈	125
라. 예 산	128
2. 관계 법규 및 제·개정 현황	129
가. 국회법	129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129
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132
라. 법규 제·개정 현황	139
3. 언론보도 현황 및 보도자료 배포 통계	141
4. 발간물 총 목록	142
가. 분석평가보고서	142
나. 정기간행물	146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연구 · 분석 보고서 발간

1. 예산·결산분석 및 사업평가 보고서

대한민국 재정 2017

- 발간일 : 2017년 3월 17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88-8 93350



국회가 심의·확정한 우리나라의 2017년도 총지출 규모는 400.5조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재정 4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17년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부문의 둔화로 2%대 수준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과의 통상환경 악화, 유가변동 등의 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 하에서 국가재정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등 경기 부양 요구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이를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여 다양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재정준칙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 발간일 : 2017년 3월 29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90-1 93350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될 때에는 국민적 관심이 국회와 예산안에 집중되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확정예산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확정된 2017년 예산의 총량과 주요내용, 재원배분의 특징, 국회 심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그림과 도표 형태로 재정개요 및 2017년 예산을 설명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국가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의 예산규모, 사업내용과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재정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종 재정 현안 관련 질의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은 제1장 재정총량, 제2장 재정건전성, 제3장 예산과 기금, 제4장 예산안 국회심의, 제5장 상임위원회별 재정 현황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2017 경제·재정수첩

- 발간일 : 2017년 3월 29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89-5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수록한 「경제·재정수첩」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복잡한 경제·사회 현상의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서, 「2017 경제·재정수첩」은 신뢰할 수 있는 재정·경제 통계를 법안 및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17 경제·재정수첩」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경제통계」에는 GDP, 고용, 물가 등 거시 경제 통계를, 제2부 「재정통계」에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수록하였으며, 제3부 「위원회별 통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규모와 주요 제도·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17권

- I. 위원회별 분석 (12권)
- II. 총괄 분석 (2권)
- III.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 IV. 성인지 결산서 분석
- V. 결산 분석 종합

- 발간일 : 2017년 8월 16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017-5 93350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 수입 401.8조원, 총지출 384.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추경 전망보다 각각 14.4조원, 16.3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2015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별 결산, 국제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 분석 등 유형별 분석주제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재정 지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46개 주요 공공기관의 결산 분석을 추가하여 재정 전반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서는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를 분석·정리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양성평등제고를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발간일 : 2017년 6월 19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004-5 93350



정부는 지난 6월 7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2조원으로 예상 초과세수 8.8조원과 세계잉여금 1.1조원, 기금여유자금 1.3조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4.2조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3조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3.5조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는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1장에서는 추경안의 개요를 소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이라는 추경의 목적과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어 정부 추경안의 4대 분야별로 재정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심의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경 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OECD의 노동시장 정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2장에서는 추경안의 세입 경정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7년 국세 초과세입 규모를 8.8조원으로 전망하여 이를 전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초과세수 규모는 11.8조원으로 정부안보다 3.0조원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이번 추경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3/4분기 집행률에 따라 0.108~0.118%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는 13개 위원회에 편성된 개별 사업을 심층 분석하였다. 기존에 수행하던 개별 세부 사업별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개요」 부분에서 위원회별 추경안 편성 사업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별 편성 사업과 심의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집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회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 20권

I. 위원회별 분석 (13권)

II.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III. 예산안 총괄 분석 (2권)

IV. 성인지 예산서 분석

V. 예산안 분석 종합

- 발간일 : 2017년 11월 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06-5 9335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 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

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 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총괄 분석 43개 주제,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15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53개 부처 사업 중 743개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1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204개 주제를 분석하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12개 부처의 60개 사업을 분석하였다.

특히,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진행하였으며, 정부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

사업평가 17-01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 발간일 : 2017년 1월 16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 ISBN : 978-89-6073-985-7 93350



최근 정부는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성과 결부되어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근로자의 단일한 근무행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강도 높은 임금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12월 복리후생비 감축, 2015.5월 임금피크제 도입, 2016.1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한 임금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5년간 1조원 절감을 목표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약 1,9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비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금출연을 통해 사내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2015.12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313개 전 공공기관은 신규채용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2016.3/4분기 기준 2,264명의 신규채용이 발생하는 등 목표한 정책효과를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개발 노력이 미흡하여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기관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하여 임금감액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6.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5개월만에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엄격한 상대평가방식의 도입을 권고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무리한 일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과도하거나 변칙적인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개발 등 임금피크제를 통해 직무 중심 임금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평가 17-02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 발간일 : 2017년 3월 13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 ISBN : 978-89-6073-987-1 93350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영실적평가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영실적평가제도를 통해 독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경영혁신 압력을 주어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해 자율성 부여 미흡, 획일적인 통제 강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경영실적평가제도, 평가과정, 평가활용, 평가의 제반 여건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현행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제도는 제량지표에 의해 점수가 좌우되고 있으며, 제량지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평가제도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면 기관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매년 임시로 구성되는 평가위원의 개인적 역량에 평가를 의존함에 따라 기관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평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경영평가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평가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경영실적평가 이후의 컨설팅은 시간적 제약, 평가단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컨설팅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7-03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 발간일 : 2017년 7월 19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 ISBN : 978-89-6073-016-8 93350



정부는 2013년부터 전(全) 소득계층 대상 0~5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연령이나 가구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시설보육을 지원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 아동수당 도입, 유아(3~5세) 보육료·유아학비 국고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확대·보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관련 통계자료 및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일선 담당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토대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보육료·유아학비 재원조달 방식의 안정성, 영아(0~2세) 양육가구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1년 대비 2015년의 가구별 자녀양육비용지출이 감소하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이 효과성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영유아 양육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양육지원정책의 운영·관리체계와 재원조달체계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고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영아 양육가구는 시설보육보다 가정양육을 선택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 지원단가보다 낮아 양육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도입이 논의 중인 아동수당제도와와의 보완·조정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영아 대상 양육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평가시리즈 5권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 발간일 : 2017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집필 : 임길환, 이병철, 안태훈, 변재연, 허가형
- ISBN : 978-89-6073-488-3 93350



본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및 융합화에 기반하여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산업생태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경제성장 전략의 하나로 혁신 성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에서는 새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국정과제 중 기술·산업·창업 정책분야를 선별하여 주요 정책·재정 사업·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점투자방향·제도 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는 마련되었으나, 과학기술·ICT 중심의 정책 설계에 따라 파생되는 분야인 산업구조, 고용 환경 및 국민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R&D혁신 대책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의 협업을 통해

‘정책-예산-평가’ 연계를 강화하고, 실현가능한 R&D 재정투자과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ICT 융합과 SW산업 발전대책을 분석한 결과, 진흥과 규제 기능이 혼재된 ICT 융합 분야의 정책 거버넌스를 조정하고, 타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ICT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전략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산업 분야별 육성 및 고도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부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농식품 R&D 추진 시 전문인력 확충 등 기술수준·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창업기반 및 중소기업 성장대책을 분석한 결과, 기술·글로벌 시장형 창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과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확대하되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평가시리즈 5권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 발간일 : 2017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집필 : 김수옥, 이채정, 김상우, 오은선, 김미량
- ISBN : 978-89-6073-525-5 93350



2017년 8월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과 기대 수명의 연장 등 인구구조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빠른 속도(1993~2013년 고령화 속도 한국: 4.06%, OECD: 1.19%)로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충격을 잘 흡수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년 일자리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12.6%)의 4배,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 평균(18.8명)의 3배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노후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와 그간 추진해 온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고령사회 사회안전망 대책을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 노년기의 4고(苦)에 대응하는 소득·건강·일자리·사회참여 및 여가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권은 총괄편으로 주제선정 배경, 정책환경 변화 및 공공사회복지 지출 추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담았다.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노후소득보장대책,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대책,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대책,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대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후사회안전망의 정책방향은 평생 사회안전망과의 연계선 상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개인은 길어진 노년기에 미리 대비하고, 정부는 정책대상을 전·후기 고령자로 세분화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평가시리즈 5권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 발간일 : 2017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집필 : 한재명, 이현철, 안태훈, 김정환
- ISBN : 978-89-6073-495-1 93350



정부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재난은 복합적 양상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보다 총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모든 재난은 사회적인 것이다(All disasters are social)”라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재난·안전 관리 자원배분 체계, 주요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지진방재), 재난보험 운영 현황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 배분 및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원배분 체계 측면에서 재난·안전 예산 사전 협의 결과의 환류가 부족하여 사전협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재난·안전 예산 배분 권한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화학 물질의 보고, 등록에 따른 유해성 심사 지연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한 대책과 함께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 관리계획서 심사 지연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또한 시설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설시공, 시설물 노후 및 지반약화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지진방재와 관련해서는 내진 설계 및 보강 내실화를 도모하고, 일반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도 원자력 관련 내진기준과 같이 해외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재난보험의 경우 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어 재보험금사업 지출 중 순재정보조 성격의 지출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또는 특별 회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분석

- 발간일 : 2017년 8월 18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 ISBN : 978-89-6073-041-0 93350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 외에도 부담금,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입 등을 기반으로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결산 심사는 정부 예산에 기반한 사업에 한정하여 정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시행 주체인 공공기관의 심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332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의 재무결산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7년 6월 현재 332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499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4,000억원 감소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주무부처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역시 16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결산집계에서 제외된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2조 4,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과 대한석탄공사 등 완전 자본잠식기관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본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률 축소 필요성,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상환방안의 실효성, 한국철도공사의 출자회사인(주)에스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및 운영 상 개선과제,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공시 체계 및 수익률 분석 등 금융·재정, 국토교통, 에너지, 농림축산, 교육·문화·방송, 보건·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사업을 분석하였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 발간일 : 2017년 11월 24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462-3 93350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및 중소기업의 육성,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자금 공급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조선·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07~2017년에 걸쳐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정책금융 수행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 11.5조원을 출자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금융의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조선·해운업 관련 부실채권 증가 등에 따라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 정책금융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이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현황과 정부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기관의 주요 정책금융 사업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관 간의 업무 중복 가능성 및 최근 부실채권 증가 등의 원인이 된 기업구조조정 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업무 중복에 대하여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복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감소하는 기업이 있으므로, 이의 세부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발간일 : 2017년 11월 24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458-6 93350



농산물은 저장이 어려워 단기간에 유통되어야 하며, 기후 등 외부요인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요공급의 조절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공산품에 비하여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급안전, 유통지원 및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 등의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재정사업 위주로 분석하고, 국제조약 및 우리나라 유통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채소류 농산물은 최근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고, 유통비용이 전체 농산물 가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WTO 협상 결과 등 국제조약에 따라 감소될 예정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 지원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한 일부 유통지원 분야 사업에서 2018년도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을 미흡하게 수행한 문제가 있었고, 수출진흥 사업에서는 수출실적 등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난 사업이 일부 있었으며, 수입비축 사업에서는 실제 필요 예산 대비 과소·과다 계상된 경우가 있었다.

2. 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 발간일 : 2017년 3월 3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991-8 93350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는 의원발의 빈도가 높은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하여, 유사 법안 발의 시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법안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을 소개하였다. 법안비용추계 개요 부분에서는 개념, 연혁 및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현황 부분에서는 법안 추계서 첨부 현황과 회답 실적을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2016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회답한 ‘지출 법안 비용추계서’ 중에서 7개 분야로 총 37건을 선정하여 추계정보를 재구성하였다.

세부 구성은 보건·복지 분야(아동수당 도입 등 6건), 산업·농업(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 등 5건), 국토·교통(주거급여 선정기준 조정 등 7건), 교육·문화·여성가족(다자녀가구 교육비 지원 등 3건), 환경·노동(최저임금 인상 등 4건), 국방·보훈·보상(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4건), 안전·행정(공직선거 선거연령 기준 하향 조정 등 8건) 등으로 되어 있다. 각 법안별로 주요 정책 내용의 소개뿐만 아니라 추계변수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비용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내용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요소를 미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지방세,
조세지출, 통계편

- 발간일 : 2017년 6월 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 ISBN : 978-89-6073-993-2 93350
- 978-89-6073-994-9 93350
- 978-89-6073-995-6 93350
- 978-89-6073-996-3 93350
- 978-89-6073-997-0 93350
- 978-89-6073-998-7 93350
- 978-89-6073-999-4 93350
- 978-89-6073-001-4 93350
- 978-89-6073-002-1 93350



조세는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복지·경제 정책 수요의 증가는 조세수입보다 재정지출 확장을 가속하여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개혁 및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세개편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조세개편 방향과 쟁점을 파악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와 현안 위주로 정리된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출간한 이후, 동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해마다 이루어지는 제도변화와 최근의 현안 등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 특히 2017년 개정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세입 관련 제도 및 쟁점을 소개를 위해 ‘지방세편’을 신규 발간하였다.

지금은 복지·경제 정책 수요에 따른 재원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본 보고서가 세제관련 입법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 발간일 : 2017년 6월 15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 ISBN : 978-89-6073-992-5 93350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예산사업과 함께 조세특례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조세특례 정비 문제 또한 주요 정책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조세특례에 대한 상세 연구 해설서로서 조세특례의 도입배경과 개정연혁, 효과성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본 보고서는 “Ⅰ. 조세특례 개관”과 “Ⅱ. 지원 분야별 조세특례 현황”의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장에서는 조세특례의 의의 및 기능과 함께 전체 운영 현황 및 특징 등을 개관하고,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10년 단위로 구분된 시대별 경제여건과 조세정책 및 조세특례제도의 주요 변천 내용 등을 연구하여 수록하였다.

Ⅱ 장에서는 현행 274개 조세특례를 총 16개 지원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및 해당 개별 조세특례제도의 세부 정보와 관련 해설 및 통계자료, 해외 유사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16개 지원분야별 조세특례제도를 감면금액 300억원 이상이 되는 ‘주요 항목’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기본사항(근거법령, 지원 목적 및 내용, 10년간 감면실적, 신설일자 및 일몰기한 등) 외에 추가 정보(개정연혁 및 주요 의원발의안, 주관부처 및 유관 기관, 자체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관련 해설 통계와 해외 유사 제도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트렌드 세법 - 과거 20년간 세법개정안의 궤적을 담다

- 발간일 : 2017년 6월 22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 ISBN : 978-89-6073-003-8 93350



조세의 역할은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진화해 오고 있다. 우리경제의 성장과 함께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조세정책도 단순한 재원조달 기능을 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의 조세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명하고, 향후 그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국회 차원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거 20년간 세법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 정책타겟(target), 키워드(key word) 등 세법개정의 주요 변화에 대한 시대별 흐름을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세법 개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증세와 감세기조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중점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 중 조세정책의 시대별 주요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대 국회('12~'16년)이후 조세정책 목표의 최우선순위는 '격차해소'에 있었다.

정책목표가 격차해소로 이동하면서 정책타겟(target)이 개인 및 기업 전체에서 특정 타겟그룹(고소득층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초점이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19대 국회('12~'16년)이후 조세정책의 키워드는 '형평', '중소기업', '고용' 등 이었다.

19대 국회('12~'16년)이후 정책타겟이 대기업,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면서 증세법안의 상대적 비중이 상승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 발간일 : 2017년 8월 17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 ISBN : 978-89-6073-032-8 93350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수입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국세수입의 회복속도가 경제의 회복속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2016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하여 경상성장률 4.7%를 두 배 이상 상회하였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빠른 개선세는 소득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법인세수의 반등과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 따른 관련 세수의 높은 증가세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그러나 향후 금리의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수 여건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우선 2016년 국세수입 실적과 그 증감 원인을 각 세목별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 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국세수입 증가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예산과 결산 간의 세수오차가 커지고 있는 원인과 그에 따른 재정운용의 부작용 및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주체의 조세부담이 소득 유형 별 또는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귀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국세수입은 242.6조원으로, 2015년 대비 24.7조원(11.3%) 증가하였고, 추경예산을 9.8조원 초과하였다. 2016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동산 시장 호조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제도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였다. 법인이익 개선,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 지속 등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국세수입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소득세 누진구조 강화, 소득파악률 제고 등 제도적 요인은 법인 이익 증가 및 임금 상승 등 양호한 경기흐름과 맞물려 세수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 발간일 : 2017년 11월 2일
- 발간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 ISBN : 978-89-6073-476-0 93350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심화, 소득분배의 악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 재정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분배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13개 세법개정안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늘리고, 고소득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정책환경을 감안하여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세법 개정안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였다. 먼저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및 세부담의 귀착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지원 세제를 포함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종합소득신고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등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주요 세목별 분석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금년 9월말 현재 338개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금년부터 본 보고서는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의 지평을 넓히고, 정부안과 차별되는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시도하였다.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소득불균형 심화, 산업의 고용흡수력 감퇴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 일자리 지원,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소득격차 확대, 고용기회 위축 등 당면한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득격차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 등으로 고용기회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조세정책의 타겟을 투자지원에서 고용촉진으로 전환하였다.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Ⅱ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발간일 : 2017년 11월 2일
- 발간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 ISBN : 978-89-6073-468-5 93350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재정수입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수입의 회복 속도가 경제의 회복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경상성장률 전망(4.6%)을 상당폭 상회하는 국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빠른 개선세는 소득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법인세수의 반등과 부동산 시장의 호조에 따른 관련 세수의 높은 증가세 등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의 세입여건의 양호한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견 다행스러운 일이나 2018년 세입예산안에서 짚어보아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입전망과 실적 간의 오차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2018회계연도 및 2017~2021년간 총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행정부와 비교하였다. 또한 2018년 세입예산상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8년 정부 및 NABO 총수입 전망 및 중기 총수입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18년 총수입을 2017년 추경(423.1조원)대비 24.0조원(+5.7%)증액한 447.1조원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 NABO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47.1조원)을 0.5조원 상회하는 447.6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2017~2021년간 총수입을 2017년 국세수입 호조세, 2018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 등에 기인하여 연평균 5.0% 증가로 전망하였다.

NABO는 2017~2021년간 총수입을 경상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국세수입의 안정적 증가와 가입자수 증가 등에 기인한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 증가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Ⅲ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 발간일 : 2017년 11월 2일
- 발간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 ISBN : 978-89-6073-467-8 93350



정부는 지난 9월 1일 429조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67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5년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포함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7년 제출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들이 집약되어 있다.

국가재정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기조절 등 국가경영에 있어서 핵심적 수단으로써, 많은 정책들은 그 집행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래 재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시계를 갖고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기 재정전망은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재정계획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특히 재정 자원은 한정된 가운데 지출수요가 급증하여 재정압박(Fiscal Pressure)에 처해 있는 국가일수록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재정전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향후 5년간의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들의 추이를 전망하고 있다.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실적과 비교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조망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선과 비교를 통하여 추가적인 재정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 계획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5개년 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Ⅳ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발간일 : 2017년 11월 2일
- 발간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 ISBN : 978-89-6073-477-7 93350



조세지출은 전체 국세수입의 대략 15%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세입여건 못지않게 국가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조세지출 정비는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라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따라 정부는 복지확충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국정과제로 하여, 2013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지출 정비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하여 2017년 조세지출 운용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조세지출 수혜계층별 효과의 개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제도개선,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회계처리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에 대한 정부의 정비방안을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조세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7 조세수첩

- 발간일 : 2017년 11월 2일
- 발간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 ISBN : 978-89-6073-483-8 93350



「2017 조세수첩」은 조세개요, 국세, 조세특례, 지방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세목별 과세체계 및 현황, 조세특례 운영 현황 및 일몰도래 조세특례,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및 현황, 지방세 조세감면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세관련 국제비교, 최근 개정 동향 등 입법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어 있다.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2017-1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 발간일 : 2017년 11월 3일
- 발간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 집필 :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
- ISBN : 978-89-6073-463-0 93350



군인연금제도는 도입 이후로 정년, 연금지급개시 연령 등을 제외한 주요 항목에서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제도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가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한 2010년 이후로는 군인연금이 시간차를 두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연금 관련 주요 현황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한 결과, 군인이 공무원보다 평균 복무기간이 짧고 기여금납부액도 적으나, 퇴역연금월액은 군인이 공무원보다 많고 평균수급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군인연금의 수익비가 공무원연금보다 높아 공적연금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정년제도 및 단기복무자 비중이 높은 이유로 퇴역연금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갖고 있다.

재정현황에서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매년 3~4조원의 국가보전금이 지출되고 있다. 국가보전금 규모는 공무원연금이 크지만, 연금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3배 큰 상황이다. 그리고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가보전금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1인당 국가보전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했을 때,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보상차원에서 퇴역직후 연금지급, 전투기간 가산 등 공무원보다 유리한 연금제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 군인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에도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상응하는 변화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면 군인연금혜택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인연금의 재정안정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군인연금혜택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군인연금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기여금부담률 인상, 기여금납부인원 확대, 기여금납부기간 연장 등이 있고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연금가산을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때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등을 실시하여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2017-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 추계

- 발간일 : 2017년 11월 3일
- 발간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 집필 : 김윤희 추계세제분석관
- ISBN : 978-89-6073-466-1 93350



본 보고서에서는 I 장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고, II장에서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하였으며, III장과 IV장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내용 및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V장에서는 건강보장 관련 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2017년 8월 9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까지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는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30.6조원의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보험료를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11조원 정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016년 건강보험 수입은 55.7조원, 지출은 52.6조원으로 당기수지 흑자는 3.1조원이다.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수지 흑자를 유지하여, 2016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20조 656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인구 대비 비중이 13.2%인 노인 인구가 지출한 급여비는 전체 급여비의 39.2%인 반면, 총 인구 대비 비중 14.5%인 아동 인구가 지출한

급여비는 전체 급여비의 8.7%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주요 방안별로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2022년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며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6년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보장성 강화와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누적적립금은 4.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지 전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장성 정책인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부수효과(side effect)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보다 더 높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발간일 : 2017년 12월 12일
- 발간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 ISBN : 978-89-6073-456-2 93350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 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18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제들을 공유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국회의 제안·수정사항을 분석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주요항목별 심사과정 상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 국회 제안·수정사항, 국회 확정된 2018년 총수입·국세수입예산, 향후 논의 과제 등이다.

3.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 보고서

2017년 수정 경제전망

- 발간일 : 2017년 6월 29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ISBN : 978-89-6073-006-9 93350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세계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2.9% 성장할 전망이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는 가계소득 개선세가 미약한 가운데 평균소비 성향 하락, 가계부채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으로 2.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주택금융 억제에 따른 주택투자 둔화, 공공 SOC 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기호전에 따른 비주거용건설투자의 확대에 여전히 양호한 증가세(6.5%)를 유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수출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의 부진에서 벗어나 6.7%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축소되었으나 설비투자는 전년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고 수출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교역조건 악화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4.7%)보다 낮은 4.3%의 성장이 전망된다.

대외 수출(통관 금액기준)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개선으로 2017년 연간 1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수입(통관 금액기준)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생산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연간 15.1%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지난해(892억 달러)보다 축소된 830억 달러 내외 흑자가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987억 달러)보다 축소된 871억 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부문은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건설 경기 호조,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 완화, 공공 부문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지난해(30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33만명(1.3%),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 주로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작용하며 지난해(1.0%)보다 높은 1.9%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라 지난해(1.4%)보다 상승한 연평균 1.8%를,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경기호전에 따른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증가, 미 달러화 강세기조 악화 등으로 전년대비 31원 하락한 연평균 1,130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 발간일 : 2017년 9월 28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ISBN : 978-89-6073-042-7 93350



2018년 우리경제는 민간소비가 완전히 개선되겠으나 건설투자가 감소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2.8% 성장할 전망이다. GDP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소비심리개선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에 힘입어 완전히 증가하겠으나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저축률 상승 등 구조적 문제로 소비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3년간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부동산 규제정책, SOC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는 비IT 업종의 투자 부진과 전년도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가 예상된다.

2018년 명목GDP성장률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면서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2017~2021년 기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8% 성장하고, 1인당 GDP는 2018년 3만 달러대에 처음 진입하고 2021년 3만 6천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2018년 수출(통관)은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른 해외 수입수요 확대로 수출물량이 증가하겠으나 수출단가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되면서 3.1% 증가하고, 2017~2021년 기간 중에는 세계경제성장세 확대에 연평균 5.4%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연간 690억 달러

내외 흑자가 예상되며, 2017~2021년 기간 중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하락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8년 취업자수 증가는 전년대비 소폭 둔화된 31.5만명, 2017~2021년 기간 중에는 경제성장률 정체, 전통 주력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등으로 연평균 32만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측면 압력이 증가하나 공급측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1.9%를 기록하고, 2017~2021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2.1%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2018년 국고채금리는 한·미간 시장금리 동조화, 주요국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2.2%,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균 2.4%를 나타낼 전망이다. 2018년 원달러 환율은 수출회복세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연평균 1,115원,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균 1,106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향후 5년(2017~202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실질GDP성장률은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가 큰 폭 하락하며 이전 5년(2012~2016년) 기간 중 3.0%에서 2.8%로 0.2%p 낮아질 전망이다.

GDP갭은 향후 5년(2017~2021년) 기간 중 실질GDP성장률이 이전 5년 기간과 동일한 2.8%를 기록할 전망이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소폭 플러스를 보일 전망이다.

경제현안분석 제93호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 발간일 : 2017년 12월 8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집필 : 김윤희·진 익
- ISBN : 978-89-6073-457-9 93350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활성화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수활성화란 기존의 수출 중심 성장으로는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서 소비-투자-성장-고용-소득 사이의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은 소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성장은 투자 증가에 기초한 경제 선순환의 형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인식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수활성화 논의 배경과 관련 해외사례를 짚어보며, 국제비교를 통해 내수 비중, 민간소비, 그리고 투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외사례를 통해 내수활성화 시도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내수 비중이 일정한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경제선순환 형성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 비율과 평균소비성향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보다 하락하고, 한국의 구매력 개선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민간소비 증가가 부진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되어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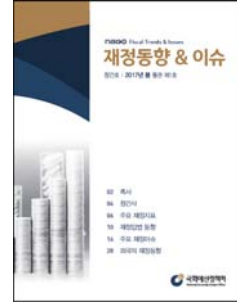
특히,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변동성과 상관성이 높았던 서비스업 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 복원 및 내수활성화의 주요 과제로 보인다.

향후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들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본 분석 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정기간행물

NABO 재정동향 & 이슈 (창간호)

- 발간일 : 2017년 4월 2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2-001546-08



2017년 2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17.7%, 17.3%이다. 또한 2017년 2월까지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4.0조원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6.1조원 개선되었으나, 중앙정부 채무(611.3조원)는 만기도래 국채 상환 등의 이유로 19.4조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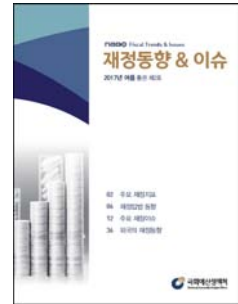
2017년 1분기 가결 법률 중 추계서가 첨부된 30건의 2018년부터 5년간 추가 재정소요는 47.3조원이다. 주요 가결 재정수반법률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2017.3.30. 가결), 일자리창출 제고를 위해 고용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7.3.30. 가결) 등이다.

2017년 1분기 재정이슈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17년 2개 기금 신설(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17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등이다. 또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체계 개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주요 재정정책들을 소개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2017, 2018회계연도 재정동향을 살펴본 결과, 주요국의 예산편성의 대체적인 특징은 재정수입 증대와 재정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과 균형 재정 기조로 요약된다. 한편 우리나라 일반정부 기준 재정규모와 채무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채무 증가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NABO 재정동향 & 이슈 (여름호)

- 발간일 : 2017년 7월 26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2-001546-08



2017년 5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47.3%, 46.1%이다. 또한 2017년 5월까지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11.3조원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6.8조원 개선되었으나, 중앙정부 채무(630.7조원)는 국고채 발행 증가 등의 이유로 2016년말 대비 38.8조원 증가하였다.

2017년 2분기까지 가결 법률 중 추계서가 첨부된 30건의 2018년부터 5년간 추가 재정소요는 47.3조원이다. 주요 가결 재정수반법률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시한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2017.3.30. 가결), 일자리 창출 제고를 위해 고용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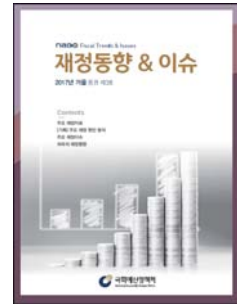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7.3.30. 가결) 등이다.

2017년 2분기 재정이슈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치매안심병원 확충, 관광업체 운영자금 융자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6개 지자체 청년수당 신설, 신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 공간정보사업 추진 등 주요 재정정책들을 소개하였다.

주요국의 재정동향으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들의 안정화 협약 준수에 대한 평가 결과를 소개하였다.

NABO 재정동향 & 이슈 (가을호)

- 발간일 : 2017년 11월 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2-001546-08



2017년 8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70.8%, 68.8%이다. 또한 2017년 8월까지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17.4조원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1.6조원 개선되었으나, 중앙정부 채무(640.2조원)는 국고채 발행 증가 등의 이유로 2016년말 대비 48.3조원 증가하였다.

2017년 3분기의 주요 재정 현안으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주요 논의 및 재정사업 현황’과 ‘현금급여 재정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균형 있게 소개하고 향후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충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8년 현금급여 재정사업 세출규모는 조세 지출을 포함하여 81.4조원으로, 최근 10년 간 현금

급여 재정사업 현황을 제시하였고, 내년도 예산안 중 현금급여 지출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017년 3분기 재정이슈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적인 주요 재정사업, 주요 재정관련 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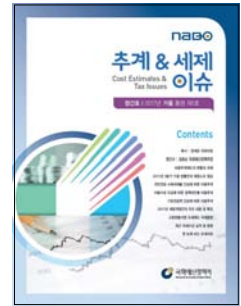
2018년도 예산안 중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사업체 인건비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병 봉급 인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재정관련 계획 및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소개하였다.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적용 3개월 일시적 유예, 일본의 2018년도 예산요구안의 특징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재정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NABO 추계 & 세제 이슈 (창간호)

- 발간일 : 2017년 10월 24일
- 발간부서 : 추계세제분석실



「NABO 추계 & 세제 이슈」는 세법 등 주요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추계 및 정책대안별 비용분석, 주요 사회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각종 세제분석, 외국 조세동향 등의 자료 제공을 통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창간호(제간)를 발간하였다.

창간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과제 등 7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I. 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과제

향후 비용추계 정보는 개별 입법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기준선 전망 및 스코어키핑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

II. 2017년 3분기 가결 법률안의 재정소요 점검

제353회국회(임시회)에서는 재정수반법률안 6건 가결로 연평균 234억원, 제354회국회(정기회)에서는 재정수반법률안 29건 가결로 연평균 7,00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된다.

III.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부터 45%로 인상할 경우 206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8조원,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50%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36조원의 발생이 예상된다.

IV.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정책대안별 비용추계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각 정책대안별 총 재정소요액은 크게 지급연령과 월지급액, 지급대상가구에 따라 3조원부터 16.6조원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안이 재원조달은 조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V.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

정부안대로 2018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 시 연 1.7조원(2018년 정부예산안 기준)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기초연금액 인상은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도 증가시키므로 정부는 지방비 부담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Ⅵ.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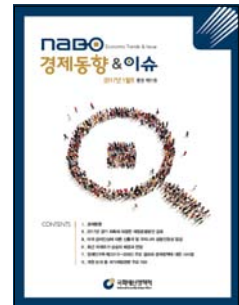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세수확대형, 투자지원에서 고용촉진으로 정책타겟 전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으로 요약되며, 연평균 세수 효과는 5.5조원으로 최근 몇 년간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Ⅶ. 고용창출지원 조세제도 국제동향

최근 주요국은 그동안의 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고용창출지원 조세제도에 있어 구체적인 지원 조건(특정계층 및 특정지역 고용창출 등) 및 한도를 설정하는 추세이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1호)

- 발간일 : 2017년 1월 25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Ⅰ.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생산과 투자가 반등하였으나, 소비심리 위축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 등 소비 둔화와 고용 상황의 어려움이 지속 되는 모습이다.

Ⅱ. 2017년 경기 위축에 대응한 재정운용방향 검토

우리 경제는 내수부문 둔화로 2017년 2%대 수준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와 경제분야(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예산 감소로 인해 재정의 경기 대응 역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검토가 필요하나, 재정 조기집행과 추가 경정예산은 모두 일정한 효과와 함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및 우리나라 금융안정성 점검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외채상환 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몇몇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한계기업, 투자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과 전망

2016년 들어 초과공급 규모 축소로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합의로 5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2017년 국제유가는 원유의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원유시장은 공급탄력성이 높아지고 에너지시장 구조변화로 수요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유가 급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V. 장래인구추계(2015~2065)의 주요 결과와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2016년 개편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소년인구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반면 고령인구와 국제순

이동자수는 증가하여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가 소폭 상향조정되고, 전망 유소년 인구는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전망이 변화하였으므로 내수, 고용 및 노인 연금·복지재정 등의 부문에 관한 경제정책의 미세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VI. 개헌 논의 중 국가재정관련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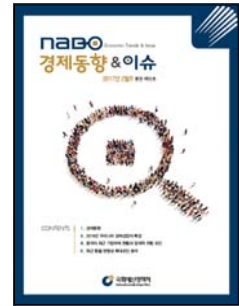
최근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헌 논의 중 재정관련 주요 쟁점은 예산법률주의 도입, 회계감사기관의 독립, 국회의 예산수정권 제한 폐지, 재정준칙 도입 및 기금·부담금 등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2009년과 2014년 자문위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재점검 및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상이한 의견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2호)

- 발간일 : 2017년 2월 28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 지속 등으로 소비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II.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

2016년 국내경제는 2.7%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은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지출과 부동산 부양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어려움이 부각되었으며, 주력 제조업의 성장둔화가 지속된 가운데 미래 대응형 투자가 위축된 것이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 수출과 내수 간, 현재와 미래 투자 간 균형회복이 필요하다.

III. 중국의 최근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적

위험 요인

중국의 기업부채는 경기둔화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지방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 불안이 발생하고 정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재정지표상으로는 정부가 관리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구조개혁 추진, 시장 중심의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기업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IV.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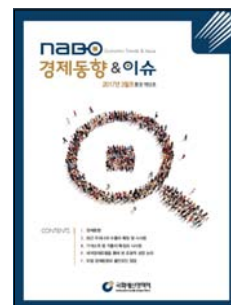
2016년 중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순환이 반복되고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국내외 금리차 및 무역개방도 축소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2016년 발생한 정치·경제적 사건의 충격이 환율변동성 확대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경제 혹은 세계경제가 환율변동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과정에 놓인 것은 아닌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3호)

- 발간일 : 2017년 3월 28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감소와 고용악화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II. 최근 우리나라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2015년,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수출이 2017년 들어서는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의 주요 특징은 수출 주력 품목의 호조, 신흥국 수출 확대,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의 동반 상승 등이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III. 가계소득 및 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 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지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으로의 환류성 악화, 자영업의 낮은 수익성, 가계부채증과 재산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소득 둔화는 가계소득여력 악화를 통해 내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내투자부진을 유발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V.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본 포용적 성장 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소득불평등 악화를 배경으로 OECD, IMF 및 세계경제포럼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가 부패·지대추구 방지, 고용·노동보수 부문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용적 성장론을 비롯한 성장전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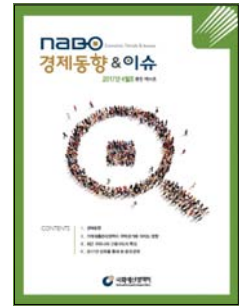
V. 유럽 경제동향과 불안요인 점검

최근 유럽경제가 회복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 시장 개선, 인플레이션 정상화,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영국의 EU탈퇴, 이탈리아 은행불안, 유럽 주요국 정치리스크, 그리스 재정위기 재연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4호)

- 발간일 : 2017년 4월 27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소비부진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경기전반의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다.

II. 가계대출관리정책이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

2015년 4/4분기~2016년 4/4분기 중 주택가격의 경우 주택가격의 추세치보다 상승폭이 적었던 반면 가계대출은 오히려 추세치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어 상이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계대출증가세가 충분히 억제되지 않아 향후 동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계대출관리정책의 강화로 금융기관들의 신규대출 기피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2000년대 이후 4번째 둔화국면을 지속할 전망이다.

III. 최근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7년 3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하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의 특징은 연령대별 취업 차별화, 자영업 취업자 확대,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 간 높은 괴리율, 고용창출력 약화 등이다.

우리나라 구직자 및 고용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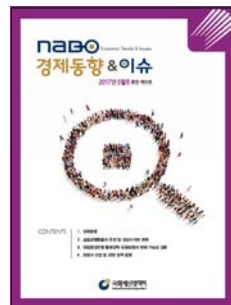
IV. 2017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경제

중국의 양회에서 나타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공급측 개혁을 심화시키고 내재된 리스크요인들을 관리하며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중속성장으로의 전환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성장정책 전환과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등도 가공무역축소, 중간재 수입감소 등을 통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5호)

- 발간일 : 2017년 5월 22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를 제외하고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가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는 가운데 건설투자 호조도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및 부채제약, 소비 불안요인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II.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및 경상수지와 관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계기로 환율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실질균형환율 추정을 통해 통화가치 저(고)평가 구간을 구분한 후 구간별 수출과 경상수지 동향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4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된 것은 환율보다 국내 내수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는 인위적 환율조정보다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내수 활성화 및 수입축진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III.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운용방향의 변화 가능성 검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등 유로존 금융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 지역 실물경기의 견조한 상승세 지속 여부가 양적완화 축소 등 통화정책 운용방향 변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 현상, 취약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등 유로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IV. 핀테크 산업 및 관련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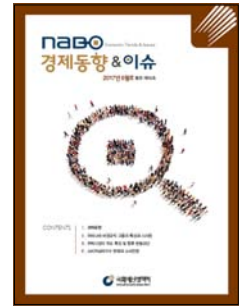
핀테크는 단순히 금융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술의 금융업 활용이 늘어나면서 핀테크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스타트업 분야를 중심으로 핀테크 발전이 지체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우려와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환경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6호)

- 발간일 : 2017년 6월 22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나 수출과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4월 중 산업생산은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생산 조정으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관련 지표의 상승 등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나 4월 중 소매 판매가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II.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시사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로는 중고령층과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이 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고용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III. 주택시장의 주요특징 및 향후 변동요인

최근 전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가격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35~54세 핵심 주택수요 계층 감소, 가계부채 급증과 금리상승 가능성 등으로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이 점증할 전망이다.

주택금융의 제반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등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안 마련이 필요하다.

IV. 소비자심리지수 변화와 소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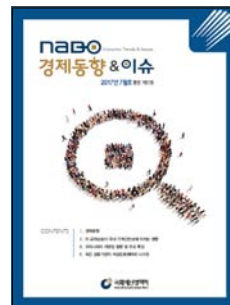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2017년들어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는 가운데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차상관계수·인과관계 분석 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민간소비에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이 하반기 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7호)

- 발간일 : 2017년 7월 2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생산 및 소비 감소 등으로 경기 회복의 탄력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대외수출은 금년들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출호조에 힘입어 설비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업생산 증가율이 4~5월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고 제조업평균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생산활동이 부진한 상황이며, 최근 소비자심리지수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5월 중 소매판매는 감소하였다.

II. 미 금리상승이 국내 가계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미 시장금리도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미 시장금리 상승에 의해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여 국내 거시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신용수요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요인에 의한 금리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거시적인 금융안정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III. 우리나라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

2017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4만명으로, 2016년 3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 고용은 유형별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매출액 및 매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자영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6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사업기반 및 기본생계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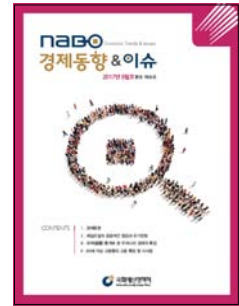
IV. 최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행태와 시사점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자산 등 투자자산 다변화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산업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통화공급의 둔화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화공급 둔화, 기업의 장기자금조달 확대,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일시적인 시장금리 급등이 우려되므로 세심한 통화관리가 필요하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8호)

- 발간일 : 2017년 8월 24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6-001572-06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감소, 국내소비 개선 미흡, 건설투자 호조세 조정 등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은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반도체·선박을 제외할 경우 수출증가율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7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산물, 전기·수도·가스 가격 상승 등에 의해 주도되어 전월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변화에 따라 등락하였다.

II. 셰일오일의 공급여건 점검과 유가전망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은 저유가가 장기화되자 기술 발전을 통해 시추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원유 시추기 및 생산대기 중 미완결 유정 증가세, 원유 생산업체들의 매도해지계약 증가 및 투자 여력 증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증산계획 시행 등의 영향으로 셰일오일의 생산량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OPEC의 감산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로 인해 2017년 유가수준은 50달러 초반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III. 국부(國富)통계로 본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국민대차대조표 상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규모는 2016년말 기준 1경 3,078조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8% 증가하였다.

GDP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주로 토지자산 증가에 기인하여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2016년 말 현재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투입요소인 고정자산은 선진국 수준으로 축적되었으며, 지식재산생산물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계순자산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가계순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IV.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특징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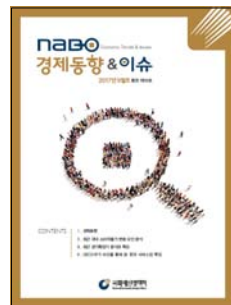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고령층이 취업시장에 나서고 있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용은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 및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1~4명 사업체 등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 및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고령 구직자 및 고령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9호)

- 발간일 : 2017년 9월 2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6-001572-06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투자 관련 선행지표들이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과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높은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으며,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변동 요인 분석

2017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에 도달하였으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주로 농축수산물 공급량 감소 및 국제유가 변동성 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 기여도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2017년 들어 공급측 물가상승요인과 관련이 깊은 항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소비자물가는 국내 총수요압력 및 실질 가계소득에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급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물가상승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내 실질수요의 견조한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이 요구된다.

III. 최근 경기확장기 분석과 특징

금번 경기확장기의 특징은 이전 경기확장기에 비해 완만한 경기흐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최근 3회의 경기순환 확장기에 대해 경기동행지수 구성지표의 변동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금번 확장기에서 경기역동성이 악화된 것은 주로 비농림업 취업자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서비스생산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부문 간 상호 영향력이 약화된 것도 요인이었다.

IV. OECD국가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서비스업 특징

서비스업은 OECD국가의 일자리와 총 부가가치 생산에서 전 산업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해오며 경기충격 발생 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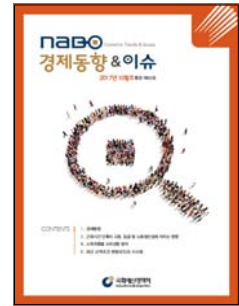
OECD국가와 한국 간 서비스업종별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낮고 업종별 편차도 컸다.

또한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중의 연도별 변동성 역시 OECD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관측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업의 고용, 부가가치 및 1인당 부가가치 비중 제고와 변동성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0호)

- 발간일 : 2017년 10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6-001572-06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에 의존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호조의 내수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9월 중 수출은 관련 통계작성 이래 월간 기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나 소매판매액, 설비투자지수, 건설기성액 등 내수 경제지표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9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였으며,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졌으나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II.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과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당근로시간 단축은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개선시키지만 단기적 고용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III. 소득계층별 소비성향 분석

최근 정부가 복지확대, 소득증대 등을 통한 민간 소비 확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대상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계층별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은 정상소득과 비정상소득 모두에 대해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진작 차원에서 가계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IV. 최근 교역조건 변동요인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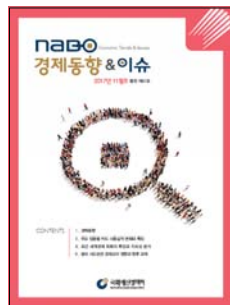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 대비 수입단가지수의 비율)이 하락세에서 최근 보합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주요 수출품인 전기·전자기기의 가격 하락 둔화와 유가 안정화 외에도 수출품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수입국의 다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해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R&D를 통한 수출품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수입 비중이 높은 원유와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1호)

- 발간일 : 2017년 11월 23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6-001572-06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건설투자를 제외한 내수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9월 중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 반등하였으며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힘입어 전월보다 상승하였다.

다만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액이 2개월 연속 위축되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2.0%를 하회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II.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최근 카드 사용실적은 「청탁금지법」 관련 업종별 영향 차별화, 여가 관련 소비확대, 유통업태별 실적 양극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흥주점, 특급호텔 등의 카드매출액은 감소하였으며, 화훼업, 일반음식점 등의 성장성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들어 여행 등 여가활동 관련 개인카드 지출액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유통업태별로는 소비조합, 편의점의 카드매출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은 전 업종 평균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III. 최근 세계경제 회복의 특징과 지속성 분석

2017년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민간투자가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히 강화되고 있다.

향후에도 신산업 확대,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 투자 여건은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정적인 국제원유수요 확대로 세계경제성장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정적인 국제원유수요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세계 경제성장률 상승과 세계무역량 신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적 임금인상 제약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 국제금리 상승의 불확실성 등이 세계 경제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IV. 중국 사드관련 경제조치 영향과 향후 과제

최근 중국과의 사드관련 갈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중국측 경제조치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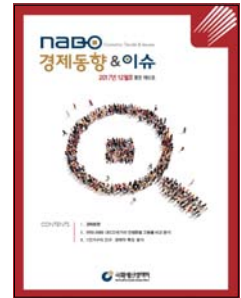
분석 결과, 관광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약 7.45조원의 잠재적인 매출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 외 국가 관광객 증가와 대 중국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 역시 중국의 경제조치를 경험하였으나 이들 국가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교역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역시 관광업을 중심으로 특정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형태의 경제 조치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2호)

- 발간일 : 2017년 12월 26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6-001572-06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 반도체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역대 11월 기준 최대 수출실적을 보이는 등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10월 중 생산, 소비, 투자 등 내수는 명절 장기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전월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감소로 전환하였다. 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연중 가장 낮은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통화스왑체결과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등으로 전월대비 26원 하락한 1,103원을 기록하였다.

II.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연령층별 고용률 비교 분석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연령층별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기준 고용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나 고령층을 제외한 고용률은

OECD 평균을 오히려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고용률 기여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 기여도는 점차 하락하고 고령층 기여도는 완만히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장기적으로 고용률은 경기변동 요인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에 기인하여 변동하는 부문이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고용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III. 1인가구의 인구·경제적 특징 분석

최근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25.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초혼연령 상승, 이혼증가, 고령화 진전에 따라 늘어나는 모습이며, 50대 1인가구의 빠른 증가세, 남성 1인 가구 비중의 확대 등의 특징을 보였다.

경제적 특징으로는 다인가구에 비해 열악한 고용 상황, 낮은 소득수준, 높은 평균소비성향을 들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와의 소득격차가 크며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1인 가구 중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해소 정책이 필요하며 향후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50대 1인 가구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NABO 산업동향 & 이슈 (창간호)

- 발간일 : 2017년 10월 23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7-001585-06



I. 산업·무역·에너지 동향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산업 등 규모가 큰 산업의 생산증가로 8월중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고, 총수출은 글로벌 제조업의 경기회복 등으로 9월 중 전년동월대비 35.0% 증가하였다.

특히 5대 주요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화학, 철강은 8월중 수출과 생산 모두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17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다.

II.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 R&D 지원의 파급 효과 분석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 R&D 지원의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기존 제조업 R&D 지원 효과보다 작으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생산 유발효과는 서비스업 분야의 파급효과로 이어져

기존 제조업 R&D지원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간 융·복합의 기반 강화와 연계효과가 큰 산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R&D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 분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사의 보험금지출이 향후 5년간(2017~2022) 총 3조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 대책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지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예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서 민간의료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IV. 생산가능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며, 고령화율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2000년대 4.3%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에는 1%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증대 방안의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UN안전보장이사회는 수출 제재, 대북 유류공급 제한을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제품의 수출액(연간 7억 6,000만달러 추산)과 함께 섬유 원부자재 수입액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을 이미 최소화하고 있는 북한의 산업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호)

- 발간일 : 2017년 11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7-001585-06



I. 고용·인구 동향

(고용) 2017년 10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만 2,000명(-1.3%) 감소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였다.

(인구) 2017년 9월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6만 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만 8천명 증가하였으나, 1월~9월 동안의 출생자수는 278,2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2% 감소하였으며,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1년 이후 초저출산율(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초혼연령 상승, 미혼증가, 결혼 후 첫 출산기간 증가 등으로 인한 가임기간의 감소가 지적되고 있다.

Ⅱ. OECD국가의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정부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아동수당(1.1조원, 6개월분 국비 기준)을 2018년 7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제도는 미국, 터키, 멕시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에서 현금급여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출산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OECD국가에서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증가시키면 OECD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0.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대상범위, 지급기준,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실업급여 인상이 생산·부가가치·취업에 미치는 영향

2018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5만 4,216원(2017년 4만 6,584원), 상한액이 6만원(2017년 5만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임금대체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2006년 46.4%→2015년 51.5%)하여 실업자가 계에 대한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OECD국가 평균 임금대체율(2014년 추정치 63.4%)보다는 낮은 편이다.

실업급여제도의 주된 목적인 '실업자 가족의 구매력을 유지해 국내 소비 수요의 감소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 인상은 국내 소비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하한액 수급자의 소비는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한액 수급자의 소비는 취업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3호)

- 발간일 : 2017년 12월 2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7-001585-06



I. 가계소득·부동산시장 동향

(가계소득) 2017년 3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1.6%), 사업소득(6.2%) 등 경상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빈곤위험에 처한 가구가 2015년 대비 0.9%p 증가하는 등 소득계층간 분배수준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지니계수 0.012 증가, 5분위 배율 1.08배 증가, 상대적 빈곤율 0.9%p 증가)가 2015년 대비 악화되었다.

(부동산시장) 2017년 10월말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였으나,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1~10월) 약 6만건 감소하였다.

2017년 10월말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고,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1~10월) 약 3만건 증가하였다.

II. 미국 세이프가드 판정품목에 대한 한·미간 수출경쟁력 분석

미국은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각각 2018년 1월과 2월에 결정할 예정으로, 세이프가드의 미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에 대한 한·미간 수출경쟁력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한국산 태양광전지제품은 미국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7%(2012년)에서 12.9%(2016년)로 확대되었고, 한국산 세탁기는 35.2%(2016년)로 시장점유율 1위인 월풀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여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II.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전원 구성의 영향 분석

정부는 신규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를 통한 단계적 원전비중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10.22.)’을 발표하였다.

원전·석탄 화력발전을 축소하고 가스·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은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발전설비 도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계획의 수립시에는 전력수요의 불확실성, 발전설비 선택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소득분위별 민간 소비 부진의 요인 분석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원인으로 가계 부채, 생계비 부담, 고령화 등의 구조적 소비 제약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고용불안을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 고용 불안은 중·상위 소득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 소비 진작 이외에도, 고용불안, 가계부채 등 구조적 소비 결정 요인에 대해 소득계층별로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

의안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회답

1. 법안비용추계 현황

가. 법안비용추계 개관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안의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추계제제분석실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비용추계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추계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다.

준비된 법안의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려면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의안 비용추계요구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788-3742)를 통해 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에 송부하면 된다.

나.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답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출범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로부터 총 10,981건을 비용추계를 회답하였다.¹⁾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2004년에는 54건의 의뢰에 그쳤으나, 제17대 국회에서 연평균 153건, 제18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487건의 의뢰가 접수되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2016년 5월 29일까지 접수된 비용추계 의뢰 건수는 3,602건으로 제18대 국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19일부터 의원 발의 법률안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고, 위원회 수정안·대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됨에 따라 비용추계 의뢰가 급증하여 2017년에는 3,039건이 의뢰되었고 2,921건의 비용추계서가 회답되었다.

1)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에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접수 및 회답 건수]

(단위 : 건)

		의뢰	철회	회답
제17대 국회	2004	54	0	54
	2005	184	39	145
	2006	184	45	139
	2007	166	23	143
	2008 (~5.29)	23	4	19
	소 계	611	111	500
제18대 국회	2008 (5.30~)	421	38	383
	2009	508	66	442
	2010	516	61	455
	2011	477	63	414
	2012 (~5.29)	24	2	22
	소 계	1,946	230	1,716
제19대 국회	2012 (5.30~)	680	41	639
	2013	721	36	685
	2014	400	24	376
	2015	1,680	57	1,623
	2016 (~5.29)	121	9	112
	소 계	3,602	167	3,435
제20대 국회	2016 (5.30~)	2,640	231	2,409
	2017	3,039	118	2,921
	소 계	5,679	349	5,330
합 계		11,838	857	10,981

주 : 1. 2017년 12월 31일 기준

2. 법안비용추계 건수는 전체 추계 건수 중 세수추계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다. 관련 보고서 발간

□ 2017 재정법령집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재정 관련 법률과 주요 하위 법령을 수록한 「재정법령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7 재정법령집」은 재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3단 대비표 형식으로 수록하여, 법령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 「2016 재정법령집」 발간 이후 제·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였다.

법령은 헌법 및 국회편, 국가재정편, 지방재정편, 국가 채권·채무편 등 모두 4가지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법령명을 알고 있을 경우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나다순 법령색인을 추가하였다.



2.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가.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과 관련된 의안의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 2004년의 의안비용추계 의뢰 건수는 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160건 이상의 세입관련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작성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였다. 2015년은 「국회법」 개정에 기인하여 전년에 비해 두 배(383건)에 달하는 비용추계가 의뢰되었다.

2015년 3월부터는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를 국회 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하고, 위원회 수정안 및 위원회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의 첨부 의무화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제도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비용추계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추계시스템 고도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비용추계서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입관련 법률안 의안비용추계 의뢰 및 처리 추이]

(단위: 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의뢰건수	5	23	41	78	183	150	120
회답건수	5	23	39	78	177	146	109
철회건수	0	0	2	0	6	4	1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뢰건수	182	204	187	194	383	559	524
회답건수	171	194	181	181	371	499	486
철회건수	11	10	6	13	12	60	38

[2017년도 세입관련 의안비용추계 분기별 접수 분포]

(단위: 건,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의뢰건수	128	114	230	52	524
(비율)	(24.4)	(21.8)	(43.9)	(9.9)	(100.0)

3. 일반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에 의하여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조사·분석 요구에 대하여 회답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 접수된 일반 조사·분석 요구는 모두 791건이다.

가. 2017년 처리 현황

[실·국별 조사·분석 접수 현황]

실·국	건수
예산분석실	249
경제분석실	168
사업평가국	51
추계세제분석실	274
경제분석국	49
합 계	791

나. 최근 5년간 추이

[최근 5년간 조사·분석 회답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552	416	347	391	791	2,497

다. 신청 및 회답 절차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국회는 2008년 7월 31일부터 조사·분석(의안비용추계 포함)과 관련하여, 의원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회 종합입법지원시스템(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Support, NALS)을 서비스하고 있다.

NALS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의원실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로 구분된 지원기관의 단일 창구를 제공하여 의원실이 효율적으로 조사·분석을 요청하고 회답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정보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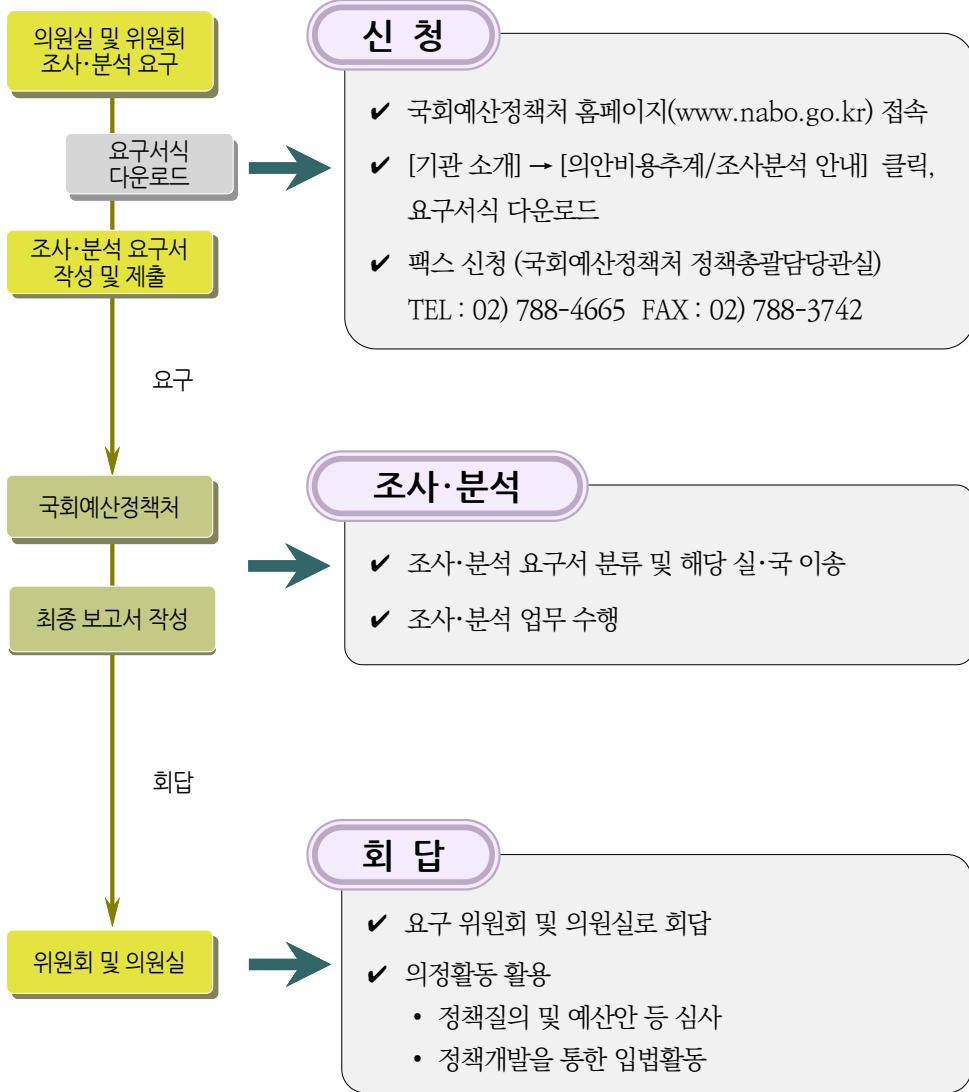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예산·경제 및 사업평가 관련 조사·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의안비용추계요구]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요구서식을 이용하는 방법

요구서식을 이용하여 팩스로 신청하는 기존 방법도 가능하다.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I

의정활동 지원 및 기관 역량 강화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예산안·결산·기금관련 토론회와 더불어 각종 예산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가. 2017 나라살림 토론회 :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

1. 개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회 심사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전 과정은 국회방송으로 녹화 중계되었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 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신울 명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자들은 일자리, 복지,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2. 토론

토론회 진행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 및 복지향상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먼저 설명하고, 이에 대해 야당, 여당, 학계 순으로 토론자들이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 나라살림 토론회 :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역설하며,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일자리는 경제활동을 통해 만드는 것이고, 재정은 바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고용 중심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재정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에 동의하면서도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과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정권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병구 교수는 앞으로 복지국가 시대의 성장전략은 소득 주도형 성장전략이며, 최후의 고용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과 부족한 공공 부문 일자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저성장 시대에는 공공 부문의 투자를 통해서 민간 부문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인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김용하 교수는 단순히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금 현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복지서비스의 일자리를 늘리고, 그 복지 서비스의 일자리가 다시 전반적으로 현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연결되는 즉,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아니라 고용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복지향상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의 역할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OECD 평균 복지국가 수준의 나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며 일단 도입되면 물리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공무원 일자리를 포함한 이번 추경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합의, 소통이 필요하며, 국민의 동의하에 중복지출을 위한 중부담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국가 재무건전성 문제에 대해 통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이 매년 거의 5%씩 가파르게 성장하기에 특히 경직성이 높은 예산의 경우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지만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강하게 반대하였다.

김종석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제도의 비전은 우선 절대빈곤을 해소하고 복지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복지가 바람직하다 보기에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정부 재정운영 기초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지출의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에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병구 교수는 복지와 고용, 그리고 재정건전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서 세금의 가치를 높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 개혁이 상당 부분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합리적 결합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해서 조세체계도 보편적이면서 누진적인 방식으로 증세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조세체계는 자본소득 과세, 법인소득 과세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한 다음 보편적인 방식의 소비세제 증세까지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였다.

김용하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보다는 증세방안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의 증가를 현행의 세수 구조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특정 사회보장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사회보장제 신설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 확대에 상응하는 조세부담도 같이 늘어나야 되며, 늘어나는 세금도 명시적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복지 수혜에 상응하는 복지 부담을 인식하도록 하여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3. 마무리

여·야당 의원들은 마무리 발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내용도 문제가 있는 추경이라 지적하며, 국민의당에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방향은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해 진짜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방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시급한 민생 현안 및 재정 현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챙겨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짧은 시일 만에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의 면피용에 불과하며, 신속한 추경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고는 하나 예산낭비, 재정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일자리는 더더욱 신중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종석 의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하는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영구적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에 부합하느냐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상징적 수준에 머문 일자리 추경이며, 관행적이고 의례적이며 보여주기식 추경안이라 지적하였다. 안전·재난 인력, 경찰, 부서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대한 증원 계획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예산과 내년 예산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윤후덕 의원은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법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에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잘된 부분은 강화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 확정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병구 교수는 지금까지 개발 시대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작용했었던 재정정책에서 이제는 복지 국가 시대의 연대와 공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합리적 결합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해서 조세체제도 보편적이면서 누진적인 방식으로 증세가 이루어져야 되나 오히려 조세체계는 자본소득 과세, 법인소득 과세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한 다음 보편적인 방식의 소비세제 증세까지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하 교수는 일반적으로 진보, 보수 모두 복지 확대나 증세 반대를 통해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것이 문제라 지적하며 향후 5년간에는 포퓰리즘이 아닌 여야가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의 복지과 증세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복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끝으로 박춘섭 예산실장은 오늘의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앞으로 추경예산안 국회 심사과정, 정부 정책에 잘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마무리하였다.

나.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

1. 개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7년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제출한 첫 예산안으로 국정철학과 주요과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담길지 국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이 7.1% 증가한 429조원 규모로, 일자리 부족과 민생안정 등의 경제현안을 해결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담겨있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도 재정건전성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 균형을 고민하며, 다가온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심사의 중요한 원칙과 방향들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써 토론회에 임하였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의 축사가 이어지며 토론회의 개회가 선언되었다. 본격적인 발제는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18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을 설명한 뒤, 조용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의 주요 정책사업과 예산심의 시 고려 사항을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학계 전문가 2명(윤영진 계명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이 참여하였으며 중·장기 경제전망과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공무원 증원, 복지지출 확대 및 SOC예산 축소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2. 발제 및 토론

▷ 발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 삶은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 배분, 중점 투자방향, 지출 구조조정 노력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재정총량의 경우 재정수지가 전년대비 소폭개선(17년 $\Delta 1.7\%$ → 18년 $\Delta 1.6\%$)되었으며, 국가채무도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였다. 국세수입 개선으로 10.7% 증가한 262.8조원의 국세수입이 예상되며, 고소득층 및 대기업 대상 세법개정을 통해 세입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예외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아래 ‘보건·복지·노동(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을 중심으로 배분되었으며, ‘SOC($\Delta 20.0\%$)’ 분야는 집행가능성과 금년도 완공되는 물량 등을 감안하여 과거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안전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 5가지를 제시하며, 국가의 책임과 성장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조용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분석내용을 발표하였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고민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인구고령화와 채무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고려되는 시기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금급여 비중이 증가하였고(15년 16.3% → 18년 18.6%), 2018년부터 의무지출 비중(50.8%)이 재량지출 비중(49.2%)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확장적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건전성도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일자리 예산 증대’, ‘혁신성장 동력 확충’, ‘안보·통일 예산 강화’, ‘보건복지예산 확충’, ‘SOC 예산 감축’, ‘국민 참여·소통 강화’, ‘재정혁신 지출구조 조정’ 등 크게 8가지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각 특징별로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 사업들을 쟁점별로 분석하였으며, 예산 심의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도 제언함으로써 토론회의 내용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 토론

새 정부가 제출한 첫 번째 본예산 심사를 앞둔 만큼,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한 원칙과 방향을 주로 논의하였다. 주된 쟁점은 재정총량 관리, 복지 분야 지출확대, 공무원 증원, SOC 예산삭감 4가지로 모아졌다.

① 재정총량 관리

윤후덕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에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178조원)에 대한 첫해 소요가 차질 없이 반영된('18년 18.7조원)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 재정지출이 성장에 기여하여 재정확보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윤영진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OECD 국가들 대비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원인을 작은 재정규모에서 찾고,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아직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조세부담률을 19.9%로 고정시킨 점을 볼 때 조세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반면 김종석 의원은 IMF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7~10% 수준의 재정확대가 이뤄진 반면, 3% 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7.1%의 재정을 지출하려는 것은 경기과열 또는 거품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정인화 의원도 2018년도 예산안이 세입 전망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세출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세입 전망이 단기적인 수출회복과 국세수입 호조 등을 전제로 한만큼, 저성장과 같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된다면 세입감소와 세출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양준모 교수는 경상 GDP 증가율 4.8% 대비 국세 증가율이 4.8% 수준이 이전 정권들의 평균인 반면, 새 정부에서는 국세수입 증가율을 10.1%로 잡은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 새로운 정책들을 위해 28조의 국채가 발행되며 5년에 걸쳐 140조에 달하는 순수국채 순증이 불가피해, 꾸준한 세입확충과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복지 분야 지출확대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9.3%로(2013년 기준) OECD 평균인 21.1%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복지 인프라 강화가 국가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윤영진 교수는 최초로 도입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 아동수당을 언급하며, 첫째와 둘째 간 차등지원의 필요성과 중장기적으로 5세에서 12세까지 현금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R&D·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을 지적하며, 복지위주의 현금성 경직적 지출보다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재원배분을 주문하였다.

또 보편적 복지가 중산층에게는 낮은 조세부담과 높은 복지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보고,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한 근본적인 복지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인화 의원도 복지부문 지출이 총지출의 34%에 달하며 작년 예산 대비 증가한 28.4조 원 중 지방교부재원을 빼면 순증된 16.7조원이 모두 복지 지출로 옮겨간 점을 지적하며, 균형을 잃은 무분별한 인기영합 예산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윤소하 의원의 경우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만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지속적인 사회복지지출을 위해 상속·증여세의 높은 세율부과와 보편적 누진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③ 공무원 증원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문 고용비중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7.6%(OECD 29개국 중 28위)이며, 인구 1천 명 당 일반정부 부문 종사자수가 38.9명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을 주장하였다. 인건비 부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17.4만 명 충원에 드는 인건비 증가분이 약 17조 원(국비 8.6조원, 지방비 8.4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1년에 계획된 생활필수 공무원이 모두 충원되었을 때에도 재정의 총지출 대비 8.5%~9% 수준에서 관리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조를 부탁하였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드는 비용추계에 연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추후에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김종석 의원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생산성이 낮은 고용을 증가시키는 퇴행적인 자원배분이라고 비판하며,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R&D·SOC·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④ SOC 예산 축소

윤후덕 의원은 감소된 SOC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요 국책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 1조 4천억 원, 계속사업으로 내년 사업에 이월되는 부분이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실행행액 기준으로 보면 SOC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 SOC 예산의 지출승수가 모든 분야에서 0.387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그동안 이루어진 SOC 투자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도 과거 정부에서 이어져온 도시재생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이익만 늘렸고 부동산 투기·난개발·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를 유발하였기에, SOC 분야의 예산감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중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SOC 예산을 호남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예산으로 평가하며, 영·호남권 지자체 예산 반영률의 불균형(영남권 82.07% 대비 호남권 26.78% 불과)을 강조하였다. SOC 예산총액도 호남이 2,879억 원인데 반해, 영남은 5,598억 원으로 두 배에 이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종석 의원도 상당한 전후방 효과를 갖고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SOC 투자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존하는 SOC 자본의 유지·보수·개량에는 투자가 소홀함을 지적하였다.

3. 마무리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의원들의 열띤 토론과 플로어의 방청객들 질문을 마친 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주요 쟁점들에 대해 총론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여건과 시민들의 체감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기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여건이 성숙될 경우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와 속도도 차츰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 수출호조와 세입확충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늘릴 것임을 강조하였다.

SOC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과 내년도 집행물량을 감안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내년도에 집행이 계획된 예산도 4조 이상인 만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SOC사업에 배분할 예정임을 밝혔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의 경우, 일각에서 제기된 인건비 부담이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다. 공무원 퇴직 시기나 인구예측을 고려할 때 63만 명의 공무원이 사회로 복귀하는 만큼, 17.4만 명 규모의 충원은 지속적인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다만 사회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할 인건비와 연금 총액을 보다 정확히 장기 추계 할 수 있는 가정들과 기준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예산분석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연번	보고일	주 제	보고자	대 상
1	2. 23	예·결산의 절차와 분석 방법	서세욱 과장	노웅래 의원
2	3. 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및 재정구조 설명	임명현 과장, 강세욱·온세현 분석관	김병욱 의원
3	11.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	임종수 과장, 강세욱·조가영 분석관	노웅래 의원

[추계세제분석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연번	보고일	주 제	보고자	대 상
1	8월	세법개정안 관련	신영임 분석관	이용호 의원

2. 정책 토론회 개최

가. 조세정책토론회: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개요

2017년 11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평가하고, 개정내용의 타당성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가 전달되었고,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7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김유찬 홍익대 교수, 전병욱 서울 시립대 교수가 참석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발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7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2017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과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고용여건과 지속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 복지제도 확충 등에 따른 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설명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지원,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주요 개정안으로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임금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등을 소개하였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가업 상속지원제도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등을 소개하였다. 세입기반 확충 측면에서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등의 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세목별 분석 및 조세지출 현황 및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의섭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재정수요 확대, 양극화 심화, 고용기회 위축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환경을 감안하면 정부의 문제 인식과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일부 세법개정의 정책효과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정교화와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 일부 고용지원 조세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한계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활용도 제고 및 집행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고소득층 세부담 상승속도, 세부담의 집중도 등이 향후 개편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간 법인세 감면 효과가 고용이나 투자 확대에 이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기업 사내유보금이 늘었고 100대 기업이 보유한 땅값이 크게 늘었다”면서 “내년 세제 개편안은 지난 10년 간의 불공정했던 조세형평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법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법인세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정액세가 아니라 누진세를 적용하고 근로장려금은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것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가 덜 걷고 더 써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조세체계 왜곡을 심화시키고 세제 추세에도 어긋난다”며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는 지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은 건 실효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는 곳이 기업 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법인이 세수를 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내후년부터 시행예정인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겨야 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10%에서 12%로 늘리는 방안은 고소득 월세 소득자가 혜택을 대부분 보기 때문에 확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핀셋과세는 경제적 합리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200억 이상에 대해 25% 세율로 일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중기적으로 재산세율 누진구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경제적 불평등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했다”며 “특정계층에 조세지원이 집중됐는데 실효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3. 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황

가. 전문가 간담회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학계,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수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정·조세 분야와 사업평가 분야의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분석보고서 작성 및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처리에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예산분석실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	2. 4	「국가재정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김유찬 김도승	홍익대 세무학과 목포대 법학과
2	3. 9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간담회」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전망시 주요 쟁점	김진현 신영석 정형선	서울대 간호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3	9. 8	문화분야 소외계층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9. 11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공적연금 크레딧 제도 비교·분석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5	12. 5	농촌태양광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신호철	한국에너지공단
6	12. 5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정책 방향	김정섭	농촌경제연구원
7	12. 8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 개선방안	양기영 주용범	광운대학교 부동산연구원
8	12. 8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와 주민자치 강화 관련 쟁점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9	12. 11	사회적기업 실태,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김혜원	교원대학교
10	12. 19	국내외 로봇산업육성정책현황과 개선과제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11	12. 21	무기체계 획득과 운영유지 연계 제고 방안	최수동	국방연구원 국방재정분석단
12	12. 21	주택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박원갑	국민은행

[추계세제분석실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	9. 8	2017년 고용지원세제 개편(안)에 대한 효과성 검토	이경근 김태경 김대원 오진균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광장 HP KOREA 중소기업중앙회
2	10. 13	조세감면	박기백	서울시립대
3	12. 22	장기 재정전망 방식 및 추계모형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12. 26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방법론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경제분석국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	9. 6	국책연구원의 주요 통일 연구 현황	이철수 송철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9. 8	북한의 인구구조와 고령화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3	9. 8	산업네트워크 분석방법	이동희	산업연구원
4	9. 22	최근 북한경제 동향	이종규	KDI 북한경제연구부
5	11. 22	에너지 정책 전환의 비용 검토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6	11. 23	신성장정책금융 2017 상반기 성과분석 발표	서승범 염성찬	한국신용정보원 녹색기술센터
7	12. 7	성향점수매칭법(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한 정부정책 성과분석	오승환 최재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8	12. 15	정부 연구개발투자지원의 경제적효과 평가 및 예측모형	황원식 오인하	산업연구원 건국대학교

[구. 경제분석실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	2. 2	CGE 모형의 기본개념 및 응용	김의준	서울대학교
2	2. 3	2017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개혁과제	이근	서울대학교
3	2. 16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4	3.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극복과 포용적 성장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5	3. 10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적정성 분석연구	이상건	국토연구원
6	3. 15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소득세편)	성명재	홍익대학교
7	3. 16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종합편)	김유찬	홍익대학교
8	3. 21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에너지 및 소비세편)	김승래	한림대학교
9	3. 23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법인세편)	이만우	고려대학교
10	3. 27	현금 및 현금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3. 28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부동산보유과세편)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12	3. 29	조세특례평가제도 시행의 성과와 개선과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13	3. 30	최근 경제 여건과 국세수입의 탈동조화에 대한 원인 및 시사점—국민계정의 구성 항목 및 항목별 세수 연관성	신승철 김성자	한국은행
14	3. 31	농림어업분야 조세특례평가 실효성 제고방안—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중심으로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	4. 11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한 거시계량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16	4. 12	지방이전 지원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성과	지해명	강원대학교
17	4. 1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고용과 R&D를 중심으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18	4. 27	법인세제 현황 및 개선과제	강석구	상공회의소
19	6. 14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20	6. 20	체감경제고통지수의 개선 및 활용	이준협 박희석 박진희	국회의장정책수석실 서울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경제동향 점검회의]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	1. 18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2. 27	유로존 주요국 선거 불안요인 점검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3	3. 29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지만수	금융연구원
4	4. 26	2017년 경제전망	유진혁 정규철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5	5. 26	산업연관분석의 이해와 활용	이진면	산업연구원
6	6. 23	고용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	오상훈	한국노동연구원
7	7. 21	세일오일 개발 현황 및 전망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8	8. 22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경제전망	이근태	LG경제연구원
9	10. 18	최근 중국경제 리스크 요인 및 한·중 관계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10	12. 22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박형무	송실대
11	12. 22	최근의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김현욱	KDI

[구. 사업평가국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	1. 18	유해물질 관리대책 평가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1. 26	재난의무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	지연구	보험개발원
3	2. 16	노후소득 보장제도 강화방안	우혜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2. 24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강성호	보험연구원
5	3. 3	국방 중기 재정소요 및 운용성과 분석 관련	백재옥	국방연구원
6	3. 10	국방재정 계획 분석 관련	조관호	국방연구원
7	3. 24	사회보장정책 체감도와 제도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4. 12	국방개혁 분석 관련	김윤태	국방연구원
9	4. 17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사업 분석 관련	박종원	부경대학교
10	4. 20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의형평성·지속가능성관련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4. 26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과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12	4. 28	국방개혁분석 관련	김윤태	국방연구원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 속
13	5. 1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 R&D시스템 혁신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	5. 12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과 및 개선과제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15	5. 1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창업·중소기업정책관련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16	5. 19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ICT융합과 SW정책 관련	변상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5. 23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혁신 관련	장석인	산업연구원
18	5. 24	여군인력의 활용 실태 분석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5. 26	기획보고서 작성 관련 안전관리 역량 등	정지범	울산과학기술대
20	5. 3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관련	이광호 이창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	6. 13	U턴 기업지원방안	이종명 문종철 정진섭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국회의장실
22	6. 14	안전예산 사전협의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	김영록	강원대학교
23	6. 15	안전예산 분류체계의 쟁점과 개선방향 등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24	6. 23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연계 방안 검토 등	전강수 김승범 허윤경	대구카톨릭대학교 VWLAB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5	7. 14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역할 및 향후 방향	문승식 신경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센터
26	7. 25	고령사회와 평생교육	고영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7	7. 25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정보공개제도	김태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 럼
28	7. 26	노인 여가수요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	7. 28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검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7. 31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 및 해소방안 검토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31	8. 7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기술 연계방안 모색	김형주 염성찬	녹색기술센터
32	8.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개선과제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정보화 사업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보화는 연구·분석 평가 및 의정지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시의성을 제고하고 중단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능개선 활동을 하며, 대내·외 소통강화를 위해 업무 산출물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는 의정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3단계 추진 계획의 완성단계인 3차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처의 업무산출물을 국민께 전달하고 전산 장애를 신속히 해결하여 업무연속성을 제고하였다.

□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3차 사업

국회법 개정(2014. 2. 28.)으로 의원발의 법안 및 위원회 대안·수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추계업무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3단계에 걸쳐 비용추계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1~2차 추진경과]

	수행시기	주요 사업내용	소요비용 (만원)
비용추계 효율화를 위한 BPR/ISP	2014.9~12.	○ 비용추계업무 분석/재설계 ○ 추계시스템 고도화 계획 분석/설계	9,000
비용추계 시스템 고도화 1차	2015.6.~12.	○ 추계사례(2,000여건) DB 구축 및 재정수반요인별 법률 연계 ○ 추계지원 기능(자동화 모듈 등) 구축	2억 3,900
비용추계 시스템 고도화 2차	2016.5.~12.	○ 추계기초자료[사례(900여건), 예·결산 설명자료] DB 구축 ○ 기초자료 검색 기능 구축	2억 6,900

고도화 사업 3차 사업에서는 2013년, 2014년, 2017년도와 2018년도 정부부처 예·결산 사업 설명 자료를 DB화하였고 2017년 추계서 3,000여 건을 DB화하였다. 추가로 국회 상임위·예결위 검토·심사 보고서 및 NABO 예·결산 분석 보고서 또한 DB화를 진행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설명자료와 위원회 보고서, NABO 보고서를 연계하여 함께 제공하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어, 향후 예·결산 분석시 유사 사업형태에 대한 분석 방향이나 주제 선정 및 총량분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정소요 점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결법률의 추계액 및 자료를 관리하는 기능을 구축, 분석관이 소관 위원회의 법률이 통과될 때마다 관련 추계서를 참조하고, 5~10년의 추계액을 입력하여 법률개정으로 인한 재정변화를 파악하는 업무를 시스템화하였다.

사업내용	• 부처 예·결산 사업 설명자료 DB(세부사업별 분리) •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검토보고서(확대구축) • NABO 보고서(확대구축) • DB화 자료 세부사업별 연계 및 유지관리 기능 구축 • DB화 자료 통합 조회 및 재정소요점검 기능 개발	세부사업 기준 101,700 건 이상 DB화
사업기간	8.5개월(2017.4.~12.)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내·외부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정보기기 장애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 활동으로는 발간보고서(41건), 정기간행물(19), 용역보고서(21건) 등을 발간 즉시 게재하고, 메일링 서비스(60건)를 실시하였으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기관 생산물에 대한 신속한 배포를 도모하였고, 보고서 요약본의 영문번역을 의뢰, 홈페이지(영문)에 등록하였다. 또한, 보고서 등록 시 원문과 요약문을 게재하고, 주요보고서(19건)의 경우 보고서 요약집인 「NABO Briefing」도 함께 게재하여 보고서 내용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운영으로 추계자료 확보시간 등을 단축시켜 2014년 대비 회답건수가 약 500% 증가하였음에도 평균 회답기간은 단축되는 등 비용추계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과거 4년간 비용추계회답건수 및 평균 회답기간]

(단위: 건, 일)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용추계회답건수	557	1,994	3,020	3,407
평균 회답기간	25	15	17	18

유지보수 사업의 성과로는 PC(210대), 모니터(169대), 프린터(150대), 서버 및 부대장비(39대) 등 업무에 활용되는 전산장비의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 1,14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1,064건을(93.1%)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직원의 업무 연속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 향후 계획

국회예산정책처는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재정·경제 통계자료와 해당 통계에 대한 기관 분석 내용, 국회 부대의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NABO의 분석내용과 국회의 부대의견, 시정요구 및 각 부처 조치결과 이력 등을 일괄 제공함으로써 타 기관 통계시스템과 차이를 보일 것이며, 활용성 및 실용성을 보다 강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으로는 업무실적평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업무 실적 평가 시 변경 배점기준의 반영 및 평가단계의 반력 등의 기능이 미비하여 업무수행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된 지 10년이 지난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제10회 OECD 의회예산기구 회의 개최 대비 홍보 사이트를 구축하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조력할 예정이다.

5. 대외협력

가. 제9회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 회의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일 간 김춘순 처장을 단장으로 영국(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열린 「제9회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 회의(9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스코틀랜드, 호주, EU(European Fiscal Board) 등 총 33개국의 각 기관에서 참석하였고 김춘순 처장은 “14년차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설립 이후 NABO의 성과와 경험을 신규 독립재정기관에게 소개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스코틀랜드, 호주, EU 등 여러 국가 및 기관에서 김춘순 처장의 발표에 대해 호평하였고, 기관 간 교류 희망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 다수의 참석자들이 NABO의 조직·인력 규모와 추진 업무 및 성과가 그동안 본인들이 인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등 이번 발표를 통해 NABO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첫째 날

글로벌 재정현안과 이에 대한 OECD 회원국 재정기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국제적으로 저성장·국가채무 증가의 상황에서 재정여력의 관리, 재정 위험 평가방법, 지방정부 등 하위정부기관과의 재정 구조 등 OECD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재정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 특별히, 최근 독립재정기관들이 논의하는 아젠다(Agenda)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탈진실(Post-truth) 시대”에의 대응, 생산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 방안(시각화)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둘째 날

벨기에 독립재정기관인 최고재정자문위원회(High Council of Finance)와의 회의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고령화 사회 대응 등 현안에 대한 독립재정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행정부 소속 독립 재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확보 방안, 벨기에 재정 준칙의 종류와 법적 근거, 벨기에의 국세-지방세 체계, 고령화 연구 그룹(Study Group on Ageing)의 성과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포함되었다. 한국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 HCF에 고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부서(Study Group on Ageing)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책 환경에 비추어볼 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되었다.

나. 그 밖의 국제교류

201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와 AMRO(아세안 및 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등의 국외 기관이 총 6차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가사업평가, 국가예산제도 파악, 국회예산과정에서 의회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 키르기즈공화국 KSP 대표단

2월 24일, 알마즈 아지모프(Almaz AZIMOV) 재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9인의 키르기즈공화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대표단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국회 내 예산심의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심층적으로 양국 간 제도에 대해 비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경제전망,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베트남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대표단

4월 19일, 레 꾸옥리(Le Quoc Ly) 국립정치아카데미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대표단 11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김춘순 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원장은 베트남 국립정치아카데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향후 공식적으로 초청 의사를 표했다. 방문단은 예방 이후 간담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배경, 주요 역할 및 기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업무 수행 핵심요소와 변화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정책 참고 사항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방문단

6월 1일, 보티르 미라자브(Botir Mirzaev) 재무부 과장을 단장으로 20인의 대표단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처의 기능을 답사하고 대한민국의 예산체계 이해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치마킹 자리를 가졌다.



□ 탄자니아 KSP 대표단

7월 24일, Jasson Bennett Bagonza(재무부 수석경제학자) 외 7인으로 구성된 탄자니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대표단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소개를 받고 벤치마킹 하는 자리를 가졌다.



□ 아세안 및 한중일 AMRO 연례협의단

8월 21일, 수미오 이시카와(Sumio Ishikawa) 책임연구위원을 대표단장으로 한 5인의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단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처의 역할과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 네팔 원조자원관리 역량과정

9월 6일, 아르준 프라사드 포크레일(Arjun Prasad Pokharel) 국장 등 15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소개받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 및 예산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에 의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2회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운영 전반에 관한 건 등을 비롯하여 여러 과제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자문이 이루어졌고 제2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수행 방향에 관한 안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2017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 일자	회의 안건
제1차 회의 2017. 6. 30.	○ 국회예산정책처 전반적 운영방향에 관한 건 ○ 예·결산 심사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건 ○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건 ○ 최근 경제 동향 및 2017년 경제 전망에 관한 건 ○ 국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에 관한 건
제2차 회의 2017. 12. 18.	○ 2018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수행방향

7.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

「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분석, 경제 및 조세·재정정책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수록하는 재정전문학술지로, 2012년 5월에 창간하여 연 2회(5월, 11월) 발간된다. 창간된 이후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온 결과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제6권 제1호에는 옥동석 교수(인천대)의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포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결합 분포, 세금의 작명과 분류 등에 관한 논문 총 6편을 수록하였으며, 제6권 제2호에는 류덕현 교수(중앙대)의 “SOC 교통분야 재정지출의 국제비교”를 포함하여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를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재정신청 확대 및 재정담당변호사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등에 관한 논문 총 6편을 수록하였다.

2017년도 「예산정책연구」는 재정사업과 예산과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재정지출과 가구·개인 단위의 소득 등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재정 정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예산법률주의와 소득주도 성장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이하였다.



[제6권 제1호 수록논문]

수록 논문	저자	소속 및 직위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사업의 책임성	옥동석	인천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 국회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비율을 중심으로	정종선	국회사무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가구의 소득-재산 결합 분포와 소득세-보유세 부담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금의 작명과 분류, 제대로 하자	최 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석좌교수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 서울시 참여 예산 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손종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과정
	김대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지방자치단체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 비용추계 금액과 예산편성 금액 차이를 통해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관

[제6권 제2호 수록논문]

수록 논문	저자	소속 및 직위
SOC 교통분야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류덕현	중앙대학 경제학 교수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를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강성호	한국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재정신청 확대 및 재정담당변호사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중심으로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 여건 분석 및 정책적 논의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기후금융 역할 분석	진 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과장
	김윤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8. 직원연구모임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은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지원조직으로서의 생산성 향상과 구성원 간의 유대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개 모임이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2017년 직원연구모임 현황]

연번	연구모임명	구성원수(현원)	대표자	구성시기(년)
1	계량경제연구회	14인	유승선	2004
2	일본 경제·문화 연구회	13인	서세욱	2011
3	예산정책현안연구회	13인	김경수	2013
4	미국예산제도연구회	10인	이은정	2017

9. 연구용역

2017년 중 발주한 연구용역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예산안 및 결산 분석, 경제정책 및 경제전망, 사업평가 등 주요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등에 활용하였다.

[연구용역과제 현황]

	연번	주 제
예산 분석실	1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진 설계 및 성능평가 방법론 비교 분석
	2	공공부조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3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활성화 효과 분석
	4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분석
	5	스마트공장 도입확산과 일자리 창출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향상 및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7	임금피크제 도입의 기업비용 감소효과 추정
	8	예산의 법규범성 제고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9	미국 2017회계연도 「통합지출승인법」 번역
	10	재정헌법 개정에 대비한 의회예산제도 국제 비교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추계세제 분석실	1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 분석
	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군의 실효성 평가
	3	치매 관련 재정소요 추계 방법 개발
	4	R&D예산 통계기준(R&D 조정계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6	외국의 비용추계 제도 비교연구
경제 분석국	1	재정지출의 분야별 효과분석을 위한 CGE 모형 구축 연구
	2	국내외 기후금융·산업의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3	주요국 공적연기금 책임투자 현황, 운영사례 및 시사점
	4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정보공개 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5	경제 불확실성 측정 지표 개발
	6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
	7	재정 및 소득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사회회계행렬(SAM) 모형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8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 개발
	9	해외 주요국의 차등적 최저임금제도와 우리나라 도입 시 기대효과 연구
	10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10. 2017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에 수행된 의정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길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2017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조사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전원으로 회신율은 87.2%(298명 중 260명)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만족도[점])

구 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분석·평가 보고서 만족도 평균	68.2	69.8	+1.6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전반적 서비스	66.6	66.8	+0.2
법안비용추계	68.4	68.7	+0.3
조사·분석 회답	64.0	65.2	+1.2
토론회 및 세미나	64.9	64.7	-0.2
의원 대면보고	69.9	72.6	+2.7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67.2	65.7	-1.5
E-mailing 서비스	67.2	67.4	+0.2
NABO Briefing	69.1	69.8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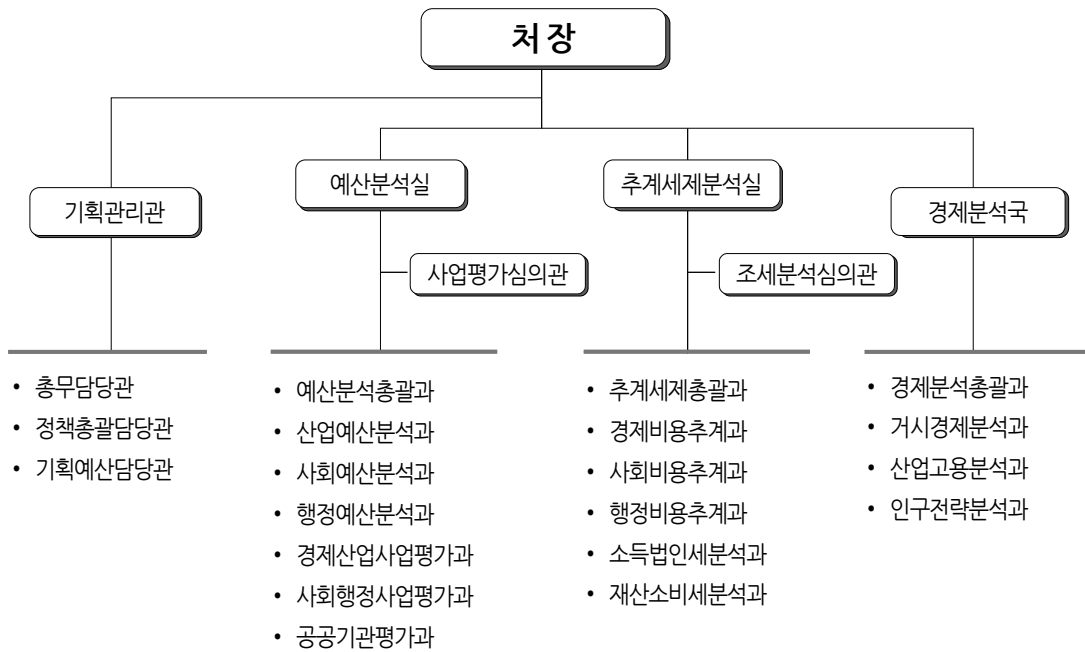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V

부 록

1. 조직 및 예산

가. 조직



2실 1국 1관, 2심의관, 3담당관, 17과

[별 표] <개정 2015. 7. 9>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 계	138
정무직 계	1
국회예산정책처장	1
일반직 계	137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
3급·4급·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11
4급·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9
4급·5급·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9
5급·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25
7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8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

나. 인력총원

(1) 인력 현황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제상 정원은 138인으로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부서가 111인,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관리관실이 24인이다. 현원은 130인(2017. 12. 31. 기준)으로 충원율은 94.2%이다.

□ 인력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처 장 실	3	3	-
기획관리관실	24	23	△1
예산분석실	51	48	△3
추계세제분석실	38	36	△2
경제분석국	22	20	△2
합 계	138	130	△8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분석·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자료분석지원요원(Research Assistant)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정원 외 인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 정원 외 인력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인 원	내 용
전문임기제	4	예산정책처장 수행비서 1인, 행정 3인
행정실무원	28	무기계약근로자 25인, 기간제 3인
자료분석지원요원(RA)	14	2017. 12. 31. 계약만료
합 계	46	

다. 인사 및 상훈

공석 발생 시 외부 전문가를 신속하게 채용하였고 적극적인 일반직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재정분석·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대통령·국회의장·국회 예산정책처장 표창 등을 수여하였다.

유형별 인사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1) 인 사

(2017. 12. 31. 기준)

구 분	대 상
임명 (12)	일반임기제 2급: 정문종, 고기석 일반임기제 3급: 최미희 일반임기제 4급: 김태완 일반임기제 5급: 김대철, 김종혁, 이채정, 황종률 일반임기제 6급: 김효경 한시임기제 7급: 신주향 전문임기제 마급: 김윤수, 황록연
승진 (8)	○ 직위승진 과장승진: 김경원 ○ 직급승진 3→2급: 정문종 5→4급: 김미량, 신봉진 6→5급: 오은선, 정주완 7→6급: 이주호, 정명호
전보 (94인)	○ 정기인사 - 신중숙(총무담당관 → 법안비용추계2과장) 외 11인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보 - 임명현(추계세제총괄과장 → 정책총괄담당관) 외 83인
전입 (22)	이사관: 조의섭 부이사관: 김경호, 송수환, 이강근, 임명현, 임종수, 정연수 서기관: 권순영, 김혜리, 성선애, 손명동, 윤동한, 윤희호, 이동엽, 행정사무관: 권순진, 어예원, 온세현, 조흥연, 행정주사: 김정훈 행정주사보: 이우영, 이화자, 황용준

구 분	대 상
전출 (18)	이사관: 박장호, 조의섭 부이사관: 김경신, 신종숙, 윤동준, 이선주, 정환철, 조신국 서기관: 민병찬, 양창석, 이홍석, 조남희, 조효정 행정사무관: 윤나나, 조은애, 최근성, 행정주사: 양승민 행정주사보: 김혜진
파견 (2)	서기관: 김경원(국외장기교육훈련) 행정사무관: 김선영(국내교육훈련)
면직 (20)	일반임기제 1급: 박용주 일반임기제 2급: 고기석, 정문종 일반임기제 3급: 윤용중 일반임기제 4급: 김대철, 김태완, 연훈수, 일반임기제 5급: 김대철, 김윤미, 김혜선, 이현철, 탁현우, 현영진, 황종률 일반임기제 6급: 나유성, 이채정, 하현선 전문임기제 다급: 김민재, 김효경

(2) 상 훈

(2017. 12. 31. 기준)

구 분	대 상
대통령 표창	상지원(부이사관)
국회의장 표창	심지현(서기관), 이종민(서기관), 김상우(행정사무관), 김성은(행정사무관), 이진우(행정사무관), 허가형(예산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장 표창	강세욱(서기관), 김재윤(서기관), 한성진(서기관), 윤주철(행정사무관), 채은동(행정사무관), 조은영(행정주사), 유보연(행정실무원)
모범공무원	여은구(행정주사)

(3) 포 상

□ 2017년도 상반기

(2017. 12. 31. 기준)

구 분			대 상
보고서 포상	공 동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개 인	조사·분석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비용추계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특별 포상			우수 직원 4인, 연찬회 및 재정절감 기여 부서 2개과, 결산, 추경 협업 기여부서 13개과, 우수TF 2개TF

□ 2017년도 하반기

(2017. 12. 31. 기준)

구 분			대 상
보고서 포상	공 동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4건
	개 인	연구보고서 등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조사·분석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6건
		비용추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특별 포상			우수 직원 4인, 예산절감 및 국감지원 공로부서 3개과, 신규업무 발굴 우수부서 10개과, 우수TF 1개TF

라. 예산

2017년도 예산(현액기준)은 총 175억 900만원으로, 성질별로는 인건비 111억 9,300만원, 기본경비 22억 2,000만원, 주요사업비 40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본경비는 행정실무원 및 자료분석보조요원 운영, 교육훈련, 전산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경제분석 및 세수추계, 국가주요사업 및 공공기관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정보화 등에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었다.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11,193	11,193	10,644	549
기본경비	2,220	2,220	1,965	255
주요사업비	4,084	4,096	3,721	375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627	677	595	82
국가 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1,058	1,106	1,048	58
장기 경제 분석 체제 구축	857	827	760	67
국가 주요사업 및 공공기관 평가	642	586	440	146
국회예산정책처 정보화	900	900	878	22
합 계	17,497	17,509	16,330	1,179

2. 관계 법규 및 제·개정 현황

가. 국회법

- 第22條의2 (국회예산정책처) ·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2003. 7.18. 법률 제6931호
 (타)일부개정 2006.10. 4. 법률 제8050호
 (타)일부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 (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제4조 (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①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가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①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한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보고 등)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 칙 <2003. 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國會圖書館長”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 칙 (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정 2003.10.28. 국회규칙 제123호
 일부개정 2006.12. 7. 국회규칙 제139호
 일부개정 2009. 4.27. 국회규칙 제150호
 일부개정 2010. 4.27. 국회규칙 제156호
 일부개정 2011. 8.26. 국회규칙 제168호
 개정 2013.12.13. 국회규칙 제184호
 개정 2015. 7. 9. 국회규칙 제191호
 개정 2017. 7.20. 국회규칙 제2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국 및 관 밑에 두는 과·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3>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2. 예결산분석·사업평가·비용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지원
3. 대외 업무 총괄·조정
4.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6. 조직 및 정원관리
7.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11.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2.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4.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6.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7.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9.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4.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국내외 재정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6.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7.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8.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나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 재정 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2.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3.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4.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5.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6.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개정 2013.12.13>)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사업평가·비용추계·세제 분석·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2.13>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사업평가·비용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3>

[본조신설 2009.4.27]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급·8급·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13]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제123호, 2003.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國會人事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國會事務處法 및國會圖書館法”을 “國會事務處法·國會圖書館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2項 및國會圖書館法 第3條第2項”을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2項,國會圖書館法 第3條第2項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國會圖書館長”을 “國會圖書館長·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國會事務處와國會圖書館”을 각각 “國會事務處·國會圖書館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國會事務處法 第7條第4項 및國會圖書館法 第5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公務員”을 “國會事務處法 第7條第4項 및國會圖書館法 第5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公務員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 중 “法律學”을 “法律學·經濟學·財政學”으로 한다.

②國會事務總長權限의委任에관한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을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圖書館長”을 “圖書館長 또는 예산정책처장”으로 하고,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國家公務員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圖書館長”을 각각 “圖書館長 및 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③국회기록물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를 “총무과(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로 한다.

제12조 중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 및 국회도서관직제 제2조”를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국회도서관직제 제2조 및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로 한다.

④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로 한다.

⑤公職者倫理法の施行에관한國會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 중 “國會事務總長 또는國會圖書館長”을 “國會事務總長·國會圖書館長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⑥국회정보공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39호,2006.1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9.4.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8.26>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3.12.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5.7.9>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15. 7. 9>

국회에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 계	138
정무직 계	1
국회에산정책처장	1
일반직 계	137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
3급·4급·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11
4급·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9
4급·5급·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29
5급·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4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25
7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8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

라. 법규 제·개정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에 관련 규칙·내규·지침 등 모두 14건의 법규를 제·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회규칙 1건(「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규정 1건, 내규 7건, 지침 5건을 개정하였다.

[법규 제·개정 현황]

(기준 : 2017. 1. 1 ~ 2017. 12. 31)

연번	법규명	구분	법규번호	일자	제·개정 이유
1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개정	지침 제108호	3.17.	현행 정책연구용역은 과제 선정 단계에서 과제의 필요성·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연구자 선정 단계에서는 응모자의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연구진행상황 점검 단계에서도 중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용역 수행 과정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이에 용역 수행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연구결과물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예산정책자문위원 회 내규	개정	내규 제84호	3.17.	현행 내규상 '직전처장'이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자문위원 구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 내규상 위원 위촉 범위에서 현직의 국회 및 정부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3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내규 제85호	3.17.	현재 경제분석실 세수추계2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입(국세외 수입)에 대한 예·결산 분석을 특별회계·기금 등 분석과 통합하여 예산분석실에서 수행하고자 함.
4	국회예산정책처 심벌마크등 상징에 관한 내규	개정	내규 제86호	6.2.	국회예산정책처 상징에 관한 내규의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으로써 처 상징 문양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내외 홍보에 활용하고자 함.
5	세입예산안부수 법률안 지정에 관한 의견 제출에 관한 내규	개정	내규 제87호	6.2.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관련 내규에서는 예산정책처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법 취지상 예산정책처의 ‘의견’은 국회의장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참고자료 이나, 현행 내규에서는 부수법안 ‘여부’로 한정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입증감 여부 등 지정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그 밖에 의견서 작성 및 제출절차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연번	법규명	구분	법규번호	일자	제·개정 이유
6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 (공동내규)	개정	내규 제89호	6.26.	국회홈페이지가 다양해지고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홈페이지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이에 국회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국회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7	국회공무원 근무성적평정지침 (공동지침)	개정	지침 제109호	6.26.	개조식·비조문식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개정하여 지침에 대한 이해도 및 다른 법규와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것임.
8	국회공무원 목표관리 및 성과연봉 등 지급지침(공동지침)	개정	지침 제110호	6.26.	「공무원보수규정」(2017. 1. 6. 시행)의 개정으로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이 5급 상당(「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	국회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공동지침)	개정	지침 제111호	6.26.	「공무원보수규정」(2017. 1. 6. 시행)의 개정으로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이 5급 상당(「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까지 확대되고 중징계자 및 주요 3대 비위(금품비위,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 징계자의 성과연봉 지급제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0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정	규칙 제202호	7.20.	정원·부서의 증가나 예산 변동 없이 조직기능의 중복·분산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업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국가재정 분석” 중심으로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11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내규 제88호	7.26.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2017년 7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재정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조직구조와 기능을 “국가재정 분석” 중심으로 통합·집중하는 등 재정분석 전문기관으로서 효과적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직제 시행규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12	국회예산정책처 위임전결규정	개정	규정 제814호	10.10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명이 변경되고 정책총괄담당관이 신설되어 일부 업무가 조정된 점 등을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13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개정	내규 제90호	11.23	편집위원의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논문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의 정원을 현행 12인 이내에서 10인 이상으로 변경함
14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목표관리 및 업무평가지침	개정	지침 제112호	12.22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2017년 8월 21일 시행)으로 실·국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개편된 실·국별 상황에 맞게 업무실적평가표 배점기준(보고서 및 회답서 점수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변경·폐지된 부서 및 직위명칭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

3. 언론보도 현황 및 보도자료 배포 통계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인사·토론회 등 소식 및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건수는 12건이며, 발간 분석보고서 및 주요 행사 관련 언론보도 건수는 총 4,106건에 달했다.

(2017. 12. 31. 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보도자료 배포(건)	13	11	45	96	82	78	100	80	11	7	10	12	545
언론보도 (건)	451	381	652	1,363	1,233	1,202	2,415	3,764	3,708	4,594	3,808	4,106	27,677

4. 발간물 총 목록

가. 분석평가보고서

(2017. 12. 기준)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예산 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1	대한민국 재정 2017	3.17
	예산분석총괄과	2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3.29
	예산분석총괄과	3	2017 경제·재정수첩	3.29
	예산분석총괄과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6.19
	실 공동	5	[결산분석시리즈 I] 1.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법제사법위원회]	8.16
	실 공동	6	[결산분석시리즈 I] 2.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8.16
	실 공동	7	[결산분석시리즈 I] 3.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8.16
	실 공동	8	[결산분석시리즈 I] 4.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16
	실 공동	9	[결산분석시리즈 I] 5.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6
	실 공동	10	[결산분석시리즈 I] 6.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국방위원회(방사청 제외)]	8.16
	실 공동	11	[결산분석시리즈 I] 7.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8.16
	실 공동	12	[결산분석시리즈 I] 8.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16
	실 공동	13	[결산분석시리즈 I] 9.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16
	실 공동	14	[결산분석시리즈 I] 10.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8.16
	실 공동	15	[결산분석시리즈 I] 11.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8.16
	실 공동	16	[결산분석시리즈 I] 12.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8.16
	행정예산분석과	17	[결산분석시리즈 II]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8.18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행정예산분석과	18	[결산분석시리즈Ⅱ]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Ⅱ	8.18
	산업예산분석과	19	[결산분석시리즈Ⅲ]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8.16
	사회예산분석과	20	[결산분석시리즈Ⅳ]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8.16
	행정예산분석과	21	[결산분석시리즈Ⅴ]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18
	공공기관평가과	22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점검·분석	8.18
	예산분석총괄과	23	[예산안분석시리즈Ⅰ] 1.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법제사법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24	[예산안분석시리즈Ⅰ] 2.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25	[예산안분석시리즈Ⅰ] 3.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26	[예산안분석시리즈Ⅰ] 4.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27	[예산안분석시리즈Ⅰ] 5.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28	[예산안분석시리즈Ⅰ] 6.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29	[예산안분석시리즈Ⅰ] 7.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방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30	[예산안분석시리즈Ⅰ] 8.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31	[예산안분석시리즈Ⅰ] 9.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32	[예산안분석시리즈Ⅰ] 10.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33	[예산안분석시리즈Ⅰ] 11.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34	[예산안분석시리즈Ⅰ] 12.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11.1
	예산분석총괄과	35	[예산안분석시리즈Ⅰ] 13.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11.1
	공공기관평가과	36	[예산안분석시리즈Ⅱ]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11.1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예산분석총괄과	37	[예산안분석시리즈 Ⅲ]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11.1
	사회예산분석과	38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1.1
	행정예산분석과	39	[예산안분석시리즈 V]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1
	공공기관평가과	40	[사업평가 17-01]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1.16
	공공기관평가과	41	[사업평가 17-02]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3.13
	사회사업평가과	42	[사업평가 17-03]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7.19
	경제산업사업평가과	43	[기획평가시리즈]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I	10.3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44	[기획평가시리즈]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II	10.3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45	[기획평가시리즈]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III	10.3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46	[기획평가시리즈]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IV	10.3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47	[기획평가시리즈]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V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48	[기획평가시리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I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49	[기획평가시리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II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0	[기획평가시리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III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1	[기획평가시리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IV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2	[기획평가시리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V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3	[기획평가시리즈]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I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4	[기획평가시리즈]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II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5	[기획평가시리즈]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III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6	[기획평가시리즈]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IV	10.3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57	[기획평가시리즈]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V	10.31
	공공기관평가과	58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11.24
	공공기관평가과	59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11.24
	예산분석총괄과	60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12.6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추계세제 분석실	법안비용추계1과	61	2017 재정법령집	3.3
	법안비용추계2과	62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3.31
	세제분석과	63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1. 조세개요	6.1
	세제분석과	64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2. 소득세	6.1
	세제분석과	65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3. 법인세	6.1
	세제분석과	66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4. 부가가치세	6.1
	세제분석과	67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5. 상속세 및 증여세	6.1
	세제분석과	68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6. 국제조세	6.1
	세제분석과	69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7. 지방세	6.1
	세제분석과	70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8. 조세지출	6.1
	세제분석과	71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9. 통계편	6.1
	세수추계2과	72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6.15
	세수추계1과	73	트렌드 세법 - 과거 20년간 세법개정안의 궤적을 담다	6.22
	세수추계1과	74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8.17
	소득법인세분석과	75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11.2
	소득법인세분석과	76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I]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11.2
	추계세제총괄과	77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I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11.2
	재산소비세분석과	78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V]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1.2
	재산소비세분석과	79	2017 조세수첩	11.2
	행정비용추계과	80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2017-1]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11.3
	사회비용추계과	81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2017-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 추계	11.3
	소득법인세분석과	82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쟁점	12.12
경제 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83	2017년 수정 경제전망	6.29
	거시경제분석과	84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9.28
	경제분석총괄과	85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12.6

나. 정기간행물

(2017. 12. 기준)

실·국	과	연번	제 목	발간일
예산 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86	NABO 재정동향 & 이슈 (창간호)	4.21
	사회예산분석과	87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7 여름호)	7.26
	사회예산분석과	88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7 가을호)	11.1
추계세계 분석실	추계세계총괄과	89	NABO 추계 & 세계 이슈 (창간호)	10.24
경제 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90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1호)	1.25
	경제정책분석과	91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2호)	2.28
	경제정책분석과	92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3호)	3.28
	거시경제분석과	93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4호)	4.27
	거시경제분석과	94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5호)	5.22
	거시경제분석과	95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6호)	6.22
	거시경제분석과	96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7호)	7.20
	거시경제분석과	97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8호)	8.24
	거시경제분석과	98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59호)	9.21
	거시경제분석과	99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0호)	10.30
	거시경제분석과	100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1호)	11.23
	거시경제분석과	101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62호)	12.26
	산업고용분석과	102	NABO 산업동향 & 이슈 (창간호)	10.24
	산업고용분석과	103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호)	12.6
	산업고용분석과	104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3호)	12.20
기획 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105	예산춘추 2016년 겨울호 (통권 제45호)	2.27
	기획예산담당관	106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1호)	5.31
	기획예산담당관	107	예산춘추 2017년 봄호 (통권 제46호)	6.5
	기획예산담당관	108	NABO 2016 연차보고서	6.5
	기획예산담당관	109	예산춘추 2017년 여름호 (통권 제47호)	8.21
	기획예산담당관	110	예산춘추 2017년 가을호 (통권 제48호)	11.13
	기획예산담당관	111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2호)	11.30

□ 기획·조정

송수환 기획관리관
권순영 기획예산담당관

□ 자료 수집

이종민 기획예산 1계장
이상오 기획예산 2계장
고준혁 예산·서무 담당
황용준 기획·법무 담당
주해리 대외협력 담당
정상식 교육·연구모임 담당
정명호 정보화 담당
채효정 홍보·편집 담당
손영진 홍보·편집 담당

□ 편집

채효정, (주)명문기획

NABO 2017 연차보고서

발 간 일	2018년 6월 15일
발 행 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인	송수환 기획관리관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주)명문기획 (TEL 02·2275·5373)

ISBN 978-89-6073-064-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

2017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연·차·보·고·서